

202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회 소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 통 령 경 호 처 소관	

2024. 11.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차 례

I. 소관기관 회부 예산안	1
II. 심사경과	2
III. 예산안 규모	3
IV.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5
V. 대체토론의 요지	246
VI. 심사결과	247
VII. 부대의견	248
【 불임 1 】 2025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255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총괄표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 불임 2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	274

202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국회운영위원회

I. 소관기관 회부 예산안

1. 국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9월 2일

2. 회부일자 : 2024년 9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2024.11.19.)
 - 국회 소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대통령경호처 소관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11.20.)
 -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회운영위원회(2024.11.21.)
 - 상정, 의결

Ⅲ. 예산안 규모

1. 국회 소관

○ 세입 예산안	45억	1,800만원
○ 세출 예산안	7,762억	600만원
- 성질별 규모		
· 인 건 비	4,215억	2,600만원
· 기 본 경 비	359억	8,400만원
· 주요사업비	3,186억	9,600만원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세입 예산안		2,700만원
○ 세출 예산안	424억	3,000만원
- 성질별 규모		
· 인 건 비	218억	6,400만원
· 기 본 경 비	101억	4,700만원
· 주요사업비	104억	1,900만원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2억 9,700만원
○ 세출예산안	1,040억 2,900만원
- 성질별 규모	
· 인 건 비	433억 2,800만원
· 기 본 경 비	218억 4,000만원
· 주요사업비	388억 6,100만원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세입예산안	5억 4,700만원
○ 세출예산안	1,390억 9,800만원
- 성질별 규모	
· 인 건 비	635억 7,700만원
· 기 본 경 비	180억 1,100만원
· 주요사업비	575억 1,000만원

IV.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상 수)

국회 소관

I.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5억 1,800만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대비 1억 7,300만원(4.0%)이 증액된 규모임.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입	4,345	4,518	173	4.0

2.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762억 6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85억 5,300만원(1.1%)이 증액된 규모임.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767,653	776,206	8,553	1.1

Ⅱ.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5년도 세출예산안 7,762억 600만원을 기관별로 보면,
 국회사무처는 금년 예산 대비 1.4% 증액된 6,575억 9,800만원,
 국회도서관은 금년 예산 대비 1.7% 감액된 772억 8,900만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예산 대비 0.2% 증액된 222억 7,900만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년 예산 대비 3.4% 증액된 190억 4,000만원임.

[2025년도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구성비 (%)
					%	
국 회 사 무 처	648,371	657,598	9,227		1.4	84.7
국 회 도 서 관	78,636	77,289	△1,347		△1.7	10.0
국회예산정책처	22,226	22,279	53		0.2	2.9
국회입법조사처	18,420	19,040	620		3.4	2.5
합 계	767,653	776,206	8,553		1.1	100.0

Ⅲ.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5년도 세출예산안 7,762억 6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금년 예산 대비 2.9% 증액된 4,215억 2,600만원,
 기본경비는 금년 예산 대비 3.9% 증액된 359억 8,400만원,
 주요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1.5% 감액된 3,186억 9,6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409,475	53.3	421,526	54.3	12,051	2.9
기 본 경 비	34,629	4.5	35,984	4.6	1,355	3.9
주 요 사 업 비	323,549	42.1	318,696	41.1	△4,853	△1.5
합 계	767,653	100.0	776,206	100.0	8,553	1.1

IV.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7조 6,296억 4,100만원 이고,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762억 600만원임. 2025년도 국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6.3% 증가한 반면,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1% 증가함.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16%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임.

[국회 소관 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비교]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A)	증가율 (%)	일반회계 세출예산(B)	증가율 (%)	구성비 (A/B*100)
2015	527,601	4.6	258,585,647	4.6	0.20
2016	556,013	5.4	268,387,199	3.8	0.21
2017	574,269	3.3	275,010,414	2.5	0.21
2018	605,161	5.4	301,417,203	9.6	0.20
2019	640,904	5.9	331,777,015	10.1	0.19
2020	678,736	5.9	356,568,644	7.5	0.19
2021	705,318	3.9	380,850,870	6.8	0.19
2022	703,841	△0.2	421,416,034	10.7	0.17
2023	730,563	3.8	446,242,182	5.9	0.16
2024	767,653	5.1	449,526,707	0.7	0.17
2025(안)	776,206	1.1	477,629,641	6.3	0.16

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임.

국회사무처

I.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45억 1,800만원으로, 금년 세입 예산 43억 4,500만원 대비 1억 7,300만원(4.0%)이 증가함.

세입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이 18억 6,200만원, 「경상이전수입」이 11억 9,4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이 9억 7,7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이 4억 2,800만원, 「관유물매각대」가 5,700만원임.

주요 증액 내역은 「재산수입」에서 ‘토지대여료’가 5,300만원, 「경상이전수입」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5,5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 6,400만원 등임.

[2025년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재 산 수 입	1,809	1,862	53	2.9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등
경 상 이 전 수 입	1,139	1,194	55	4.8	변상금, 위약금 등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913	977	64	7.0	면허료및수수료,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427	428	1	0.2	기타잡수입
관 유 물 매 각 대	57	57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합 계	4,345	4,518	173	4.0	

자료: 국회사무처

2.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6,575억 9,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2억 2,700만원(1.4%)이 증액됨.

[2025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648,371	657,598	9,227	1.4

자료: 국회사무처

2025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금년 예산 대비 3.2% 증액된 3,615억 1,800만원, 기본경비는 금년 예산 대비 3.8% 증액된 283억 4,300만원, 주요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1.1% 감액된 2,677억 3,7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350,374	54.0	361,518	55.0	11,144	3.2
기 본 경 비	27,310	4.2	28,343	4.3	1,033	3.8
주요사업비	270,687	41.7	267,737	40.7	△2,950	△1.1
합 계	648,371	100.0	657,598	100.0	9,227	1.4

자료: 국회사무처

2025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인 국회세종 의사당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회세종 의사당건립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세종 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둘째, 2025년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 및 전시 기획, 기념공간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의회 발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야 협치 및 국민 화합에 기반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19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함.

Ⅱ.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국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수반하는 수수료를 세입 조치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59	92	92	-	-

자료: 국회사무처

주요 내역은 ① 응시수수료 9,100만원, ② 정보공개수수료 100만원임.

나. 응시수수료 세입예산안 감액 필요

응시수수료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제34조¹⁾에 따라 공무

1) 제34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연구관 채용시험 : 1만원
2. 6·7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 7천원
3. 8·9급 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채용시험의 응시자가 응시원서 제출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채용 시험의 종류에 따라 5천원에서 1만원의 범위에서 수수료가 책정됨.

2025년도 응시수수료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와 같이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납액의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응시수수료 예·결산 추이]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수납율 (B/A)
2021년	90,000,000	76,714,060	85.2
2022년	91,000,000	61,105,000	67.1
2023년	91,000,000	58,556,800	64.3
2024년 ¹⁾ (9월말)	91,000,000	52,902,000	58.1

각주:1) 2024년도 응시수수료는 9월말 현재 공고된 공개·경력채용시험의 수수료수납액 및 수납예정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회사무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응시수수료의 예·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9,000만원 ~ 9,100만원이고 수납액은 5,900만원 ~ 7,700만원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단,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철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으로, 수납율은 64.3%~85.2%에 불과하였음. 2024년도의 경우 응시수수료 예산안은 9,1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기준 수납(예정)액은 약 5,300만원으로 현재 수납율은 58.1%임.

동 세입액의 감소는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 수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21년도 10,552명에서 2024년도 6,3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입법고시	8급공채	9급공채	합 계
2021년	3,701	3,156	3,695	10,552
2022년	2,941	2,709	2,211	7,861
2023년	3,054	2,004	1,779	6,837
2024년	2,751	1,957	1,653	6,361

자료: 국회사무처

최근 4년간 국회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의 감소와 수납액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년도 응시수수료 세입예산안 9,100만원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은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인 수납가능액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다.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서비스 정산 지연 우려 개선 필요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방식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의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서비스를 위하여 토스페이먼츠와 계약(2023.12.)을 체결²⁾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³⁾하고 있음.

응시수수료의 전자결제 수단 중 ‘휴대폰 결제 방식’은 응시수수료를 응시자의 휴대폰 요금 납부액에 포함하여 결제하는 방식임.

그런데, 동 계약업체의 정산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석 달 후 3일째 되는 날”에 해당 금액이 국회사무처로 정산되므로 그 이후에 세입조치가 가능함.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시 정산액 산정일 기준(토스페이먼츠)]

	신용 ·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정산액 산정일	다음 달 + 4영업일 후	다음 달 + 4영업일 후	석 달 후 3일

2) 국회사무처는 종전 국회채용시스템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업체(다날)의 요청으로 2023.11.30. 일자로 계약해지한 후 토스페이먼츠와 계약함.

3) 국회사무처는 업체에 계약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응시자)가 일정 수수료를 업체에 부담하며, 동 업체는 응시자로부터 수납한 금액 중 부가수수료를 제한 최종 정산금액을 국회사무처에 납부함.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대체로 상반기에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고 있으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연중 수시로 채용공고와 응시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정산 기준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10월 이후에 시작되고 해당 시험의 응시자가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연내 수납과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응시수수료의 정산 및 수납 지연은 징수결정액의 연내 수납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시스템 계약업체와 정산시기 변경 협의 또는 계약업체 변경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의 연내 수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입법활동지원(1031-300)

가. 개 요

「입법활동지원」은 국회의장단·국회의원·원내교섭단체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입법자료 수집·연구비, 의원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정책홍보물 유인비, 공공요금 및 사무실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504억 5,000만원 대비 11억 7,100만원 감액(△2.3%)된 49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입법활동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47,235	50,450	49,279	△1,171	△2.3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의정활동지원 인턴경비 106억 5,300만원, ② 의원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54억 400만원, ③ 의원사무실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36억원, ④ 정책자료 발송료 22억 6,600만원, ⑤ 의원 국민연금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료 20억 900만원, ⑥ SNS동영상 제작지원 15억원, ⑦ 주요입법·정책과제 관련 공론조사 등 25억 4,400만원 등임.

나. 202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 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사업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⁴⁾.

국회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⁵⁾, 입법활동지원 사업은 2023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상 만족도 조사 표본 수가 부족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동 사업 내역 중 인건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직성 경비 이외의 항목에 대한 예산 감액조정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SNS동영상 제작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원(△50%) 감액 편성되는 등의 조정이 있었음.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4. (생략)

5) 「국회 20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4.3.)

다. 입법활동지원 성과관리 강화 필요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입법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집행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동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성과지표는 “의원실 만족도(단위: 점)”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의원실을 대상으로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측정하고 있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상 입법활동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구 분	'21	'22	'23	'2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의원실 만족도 (단위:점)	목표	신규	70	70	-	의원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부여 (100/75/50/25/0) 후 산술평균	만족도 조사
	실적	신규	65.8	68.3	-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원경비를 신청하는 의원실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서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경비의 신청·지급 체계에 대한 만족도, 보완 안내의 적절성, 지원의 정확성·신속성, 문의 응대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만족도 및 그 밖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

2023년도 입법활동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가 30건 (수혜대상의 10%)에 불과하여 조사의 신뢰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입법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실시기간	표본수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 (객관식 평균)	개선요구사항 (주관식 건수)
2022	2022. 12. 1. ~ 2022. 12. 31. (1개월간)	88건	65.8점	33건
2023	2024. 2. 1. ~ 2024. 2. 29. (1개월간)	30건	68.3점	9건

자료: 국회사무처

성과지표의 신뢰도는 성과평가의 정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관련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 표본 수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6)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2023년도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도 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설문응답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2024년도의 경우 만족도 조사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 경비 신청·집행이 활발한 12월에 설문을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응답 및 적정 표본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3. 국제회의(1033-301)

가. 개 요

「국제회의」 사업은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19억 9,2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 (13.0%) 증액된 2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① 국제회의 참석 8억 1,200만원, ② 국제회의 개최 6억 8,600만원, ③ 국제회의 공통경비 1억 4,000만원, ④ 국제기구 분담금 4억 9,800만원 등임.

[2025년도 국제회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2,197	1,992	2,251	259	13.0

자료: 국회사무처

나.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필요

‘국제회의 개최’ 예산은 2024년도의 2억 2,900만원에서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안 4억 5,700만원(일반용역비)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임.

‘믹타(MIKTA)’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중견국(멕시코 Mexico, 인도네시아 Indonesia, 대한민국 Korea, 튀르키예 Türkiye,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이 참여하여 만든 국가협의체로서,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우리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것으로 기존의 정부 중심 협의체를 의회외교의 장으로 외연을 확장한 것임.

믹타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인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므타 국회의장회의의 연도별 개최 현황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므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현황]

차수	회의기간	개최지	의제 및 회의 성과
제1차	2015. 7. 1. ~ 5.	대한민국 서울	- 의제 :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 - 외교장관회의에서 시작된 므타 협의체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고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므타의 공고화 도모
제2차	2016. 10. 5. ~ 7.	호주 호바트	- 의제 : 열린 정부를 위한 열린 의회 - 금융과 경제, 안보, 환경, 빈곤,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글로벌 현안들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공유
제3차	2017. 9. 28. ~ 29.	튀르키예 이스탄불	- 의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국회의 역할 -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결집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회의체 공고화 - 회의 계기 양자면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제4차	2018.	인도네시아	- 의제 : 평화 및 번영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

차수	회의기간	개최지	의제 및 회의 성과
	9. 15. ~ 17.	발리	-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 국 의회정상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
제5차	2019. 11. 7. ~ 8.	멕시코 멕시코 시티	- 의제 :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 - 사회적 포용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확인 - 공동선언문에 우리 측에서 요구한 한반도 평화 조항 반영
제6차	2020. 12. 17.	화상회의 (대한민국)	- 의제 :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
제7차	2022. 2. 7.	화상회의 (호주)	- 의제 :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의회 - 코로나19로 인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노력을 소개, 각 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제8차	2023. 3. 9.	튀르키예 이스탄불	- 의제 :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 - 다자주의·글로벌 상호의존성 하에서 향후 참석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9차	2023. 11. 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의제 :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과제 대응 - 의회가 직면하는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 -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 요청
제10차	2024. 5. 6.	멕시코 멕시코 시티	- 의제 :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 - 국제사회 인권·평화 증진에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강조 및 의회외교 발전방안 제시 - 차기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장국 수임을 통해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지속성 확보 및 글로벌 현안 논의 주도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함

자료: 국회사무처

내년도의 경우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수임⁷⁾함에 따라 우리 국회가 2025년도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25년 상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대표단 규모는 약 100명(각 국 의장 및 의원, 수행원 등)이고, 개회식·본회의 및 폐회식, 양자회담·환영만찬 및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CO)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2025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안	내 용
회의장 대관	90	본회의장, 공동성명 기초위원회 회의장, 양자면담장, CP룸, 미디어센터, 대기실 등
숙박 및 수송	87	대표단 숙박비 및 의전 차량 등
행사장 및 부대시설 조성	95	무대·음향·영상·중계·통역·사무국 등 각종 행사 진행 시스템 설치 및 철거
연 회	70	공식 오·만찬, 수행원 오·만찬, 세션 간 커피브레이크 등
홍 보	30	엠블럼 제작, 회의 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인건비	60	행사 기획·운용 인력, 통·번역, 리에종, 진행요원, 보안요원 등
운영비	5	리허설, 행사보험 등
문화행사 등	20	문화 행사, 대표단별 비공식 일정 등
소 계		457 (일반용역비, 210-14)

자료: 국회사무처

7) 의장국 수임기간: 2024년 5월 6일(제10차 회의 개최일) 이후 2025년도 제11차 회의 개최일까지

국회사무처는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사회·정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회의 · 문화행사 등 세부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초청, 참가자 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현장 운영 및 사후 관리 등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가. 개 요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도출을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출연기관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4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국회미래연구원	4,020	4,261	4,261	-	-
- 기관운영출연금(350-01)	2,474	2,615	2,615	-	-
- 사업출연금(350-02)	1,546	1,646	1,646	-	-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첫째, 기관운영출연금(350-01)은 인건비(23억 7,900만원), 경상운영비(2억 3,400만원) 및 시설구축운영비(200만원)으로 구성되고, 내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한 26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둘째, 사업출연금(350-02)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와 같은 수준인 1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연구계획(안)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① 미래예측 및 분석, ②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③ 국제전략, ④ 국회 미래의제 지원 등의 중점연구사업 부문과 ①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모니터링 연구, ②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③ 국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④ 한국인의 행복연구 등 연구기반사업 부문의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 계획(안)]

부 문		연구과제명
중점 연구 사업 부문	미래예측 및 분석	- 미래 트렌드 및 이머징 이슈 탐색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 상임위(특별위 포함) 및 의원실 등 국회 내·외부 연구수요 조사·반영 후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검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연구과제 선정 예정
	국제전략	
	국회 미래의제 지원	- 국회 미래의제 수시 연구
연구기반사업부문		-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 국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 한국인의 행복연구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나. 2025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미반영분 증액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의 기관운영출연금(350-01) 26억 1,500만원 중 대부분 (91%)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정규직 23인을 기준으로 2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기관운영출연금(350-01)	2,474	2,615	2,615	-	-
인건비	2,298	2,379	2,379	-	-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2025년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과 달리 2024년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8,100만원(3.5%)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 처우개선분이 반영됨에 따른 것임.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2025년의 경우에도 처우개선분인 3% 증액이 반영되었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에 처우개선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는 정부의 공통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⁸⁾ 정부의 공

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3

통기준인 3%를 국회미래연구원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모두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구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448	7,671	223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654	15,131	477	3.3
산업연구원	13,305	13,706	401	3.0
한국개발연구원	33,426	34,546	1,120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578	11,962	384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65	14,009	444	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444	27,326	882	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975	15,461	486	3.2
한국환경연구원	14,215	14,677	462	3.3
국회미래연구원	2,379	2,379	-	-

자료: 각 연구기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종합하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년도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정부의 공통기준인 3%를 반영한 7,100만원⁹⁾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5. 인사및운영지원(2031-301)

가. 개 요

「인사및운영지원」 사업은 인사제도 운영, 채용제도 운영,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3,000만원(12.4%) 증액된 66억 800만원임.

[2025년도 인사및운영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5,589	5,878	6,608	730	12.4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인사제도 운영에 2억 2,800만원, ② 채용제도 운영에 10억 8,200만원, ③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에 34억 8,500만원, ④ 기타 운영지원에 15억 600만원 등임.

나. 인사제도 운영: 세목조정 집행 부적정 및 실소요에 부합하는 일반용역비 편성 필요

‘인사제도 운영’은 인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평가의 실시 등 인사제도

9) 2,379백만원(2024년도 인건비) × 3%(처우개선분) = 7,100만원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회사무처는 직원 인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역량평가·다면평가 등을 외부 전문업체 위탁용역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고 있음.

내년도 인사제도 운영 일반용역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일반용역비는 집행과정에서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액 대비 증액집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 8,000만원 대비 5,400만원을 초과한 1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의 경우도 8월말 기준 예산액 8,000만원 대비 6,000만원을 초과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2024년도 인사제도운영 일반용역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조정액)	집행액	조정 사유
2023년도 결산	80	150 (70)	134	- 과장급 역량평가 횟수 증가 (2회→4회) - 고위직공무원 다면평가 위탁 신규 실시
2024년도 집행 (8월말 기준)	80	152 (72)	140	- 5급 역량평가 추가 실시(2회) - 고위직공무원 다면평가 위탁사업 (연 2회) - 5급 다면평가 실시(연 1회)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역량평가 대상자가 중간관리자급 승진후보자로 확대되는 등 평가 대상자 및 수요자가 증가하였고, 다면평가의 공정성·체계성을 확보하고 비밀유지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수행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용역비 집행소요가 증가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역량평가와 다면평가 등은 예측 가능하고 정례화된 집행소요에 해당하고, 인사·승진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행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세목조정을 통해 소요액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따라서, 인사제도운영 일반용역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소요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국회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신규): 개인별 상담 단계적 확대 필요

‘기타운영지원’ 사업 내 ‘국회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원(일반용역비, 210-14)임.

동 사업은 국회 구성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을 정식으로 신규 편성하기에 앞서 2023년 소규모로 시범 운영(사업기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1천만원)하였고, 2024년에는 국회 내 마음건강센터를 개설(2024.10.)하고 전년 대비 규모를 확대하여 시범운영(소요예산: 5천만원) 중임.

2025년도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 직원¹⁰⁾을 대상으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자가진단서비스를 연 1회 제공하고, 개인별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의 경우 총 정원의 2.7%인 160명¹¹⁾을 대상으로 기본 5회 상담을 진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최대 10회까지 개인상담을 진행할 계획임.

[2025년도 국회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소요예산
온라인 자가진단	전직원 대상 전용사이트를 이용한 정신건강 1회 측정	전용 홈페이지 구축	2,000
		자가진단비 (정원 5,900명 × 300원)	2,000
개인상담 (1회 50분)	비대면 또는 대면상담 상담인원 : 160명* (총 정원의 2.7%)	총 상담 횟수 : 800회 - 160명 × 5회 × 10만원 *고위험군 2회 연장, 최대 10회	80,000
심리상담사	파견 심리상담사 2명	1명 주 2일 파견 (2명 × 12월 × 400만원)	96,000
운영관리비	직원 예약관리 및 보고 등 소요비용		2,000
부가세	10%		18,200
소 계			200,200

자료: 국회사무처

최근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소속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정신·심리적 건강을 전문적으

10) 국회의원, 국회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인턴 및 후생종업원 등 총 5,900명의 정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함.

11)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예산상 개인별 상담 대상규모(총 정원의 2.7%)를 결정함에 있어 유사사업 선 시행 기관인 법원행정처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설명임.

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정규 사업화는 국회 직원의 정신건강과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직무 특성에 맞는 자가진단과 효과적인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별 상담서비스의 대상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

가. 개 요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은 국회 의정활동 홍보 및 국회 주요행사 현장 취재진 구성·지원 등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회 홍보를 강화하고,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및 운영을 통하여 국회방문객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홍보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8,900만원 감액(△9.7%)된 36억 3,500만원임.

[2025년도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3,536	4,024	3,635	△389	△9.7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언론 및 공보활동 5억 3,900만원, ② 국회사진실 운영 4,400만원, ③ 국회보 발간 6억 3,600만원, ④ 기타 국회홍보활동 5,200만원, ⑤ 국회박물관 운영 7억 9,900만원, ⑥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2억 4,800만원, ⑦ 국회 업무노트·달력 및 국회수첩 제작 2억 5,600만원, ⑧ 국회 온라인미디어 운영 7억 6,200만원, ⑨ 의정활동광고 2억 9,900만원 등임.

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수요증가를 고려한 예산 증액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언론 및 공보활동’에 편성된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800만원(일반용역비, 210-14)으로,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과 동일 규모로 편성되었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의 하나로, 기자회견 횟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어통역 제공 건수 및 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어통역 서비스의 월 평균 제공시간을 살펴보면, 2021년도 1,138분에서 2023년도 2,382분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 기준 3,008분이며, 2024년도 1월~9월 전체 수어통역 제공 시간(27,069분)은 전년 동기(21,633분) 대비 약 25.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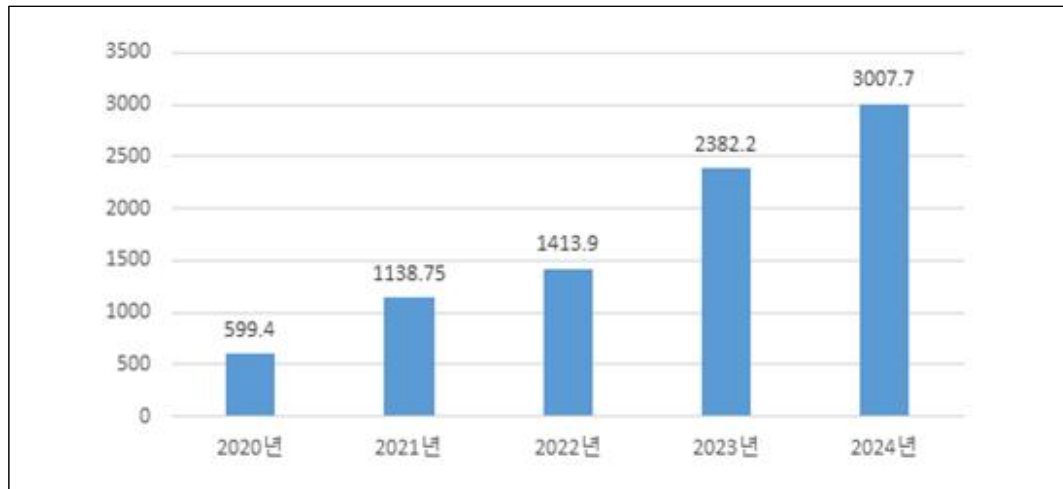
[연도별 기자회견 및 수어통역 실시 현황]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9월)
기자회견 건수 (월평균 건수)		2,650건 (220.8건)	2,794건 (232.8건)	4,723건 (393.6건)	3,896건 (432.9건)
수어 통역	건수 (월평균)	2,048건 (170.6건)	2,332건 (194.3건)	4,374건 (364.5건)	3,846건 (427.3건)
	시간 (월평균)	13,665분 (1,138.7분)	16,967분 (1,413.9분)	28,586분 (2,382.2분)	27,069분 (3,007.7분)

자료: 국회사무처

[연도별 월평균 수어통역 진행시간 현황]

단위: 분



자료: 국회사무처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이후 매년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세목 조정을 통한 증액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¹²⁾.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예산집행 현황]

	진행시간 (분)	분당 단가 (원)	예산액(A) (백만원)	집행액(B) (백만원)	B-A
2022년도	16,967	5,055.05	95	86	△9
2023년도	28,568	4,971.22	108	142	34
2024년도 (1월~9월)	27,069	5,061.39	108	136	28

자료: 국회사무처

12) 기자회견 수어통역 제공을 위한 예산부족분은 세목조정 증액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 대비 3,400만원, 2024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 기준 예산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1억 800만원은 2024년도 분당단가(5,061.39원) 기준으로 월간 약 1,778분의 수어통역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나, 이는 2024년도 1월~9월 간 월 평균 수어통역 시간(3,008분)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업 예산안은 수어통역 서비스 수요의 증가 추이와 안정적인 제공 필요성 및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를 감안한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13)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2024년도 월 평균 수어통역 시간(3,111분)과 최근 4년간 평균 분당단가(5,039.88원)를 기초로 2025년도 소요예산액을 산출하면 총 1억 8,800만원이므로,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 집행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는 국회박물관 전시 콘텐츠 확보 및 연구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국회 및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헌정자료를 수집하고 등록·관리하는 사업임.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에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는 전시 콘텐츠, 연구자료 등 헌정자료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액인 1억 1,000만원임.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헌정자료 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은 과거 1천만원 수준으로 편성·집행되었으나, 국회박물관의 전면개편(2022.4.)¹⁴⁾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으로 증액된 이래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동 자산취득비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은 5,2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이며, 집행률은 60% 내외임.

14) 국회박물관은 1998년 헌정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건립되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전시공간의 체계적 개편을 위하여 건립 22년만인 2020년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후 2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국회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4월 11일 다시 개관하였음.

[최근 4년간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43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헌정자료 구입실적
2021	110	70	63.6%	총 197건 539점
2022	110	52	47.3%	총 52건 98점
2023	110	61	55.5%	총 154건 342점
2024 (10월말)	110	49	44.5%	총 118건 328점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주요 국립박물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준하여 종전까지 “공개구입” 방식을 중심으로 헌정자료를 수집하여 왔는데¹⁵⁾, 이는 ① 공개구입 공고 게재 → ② 자료매도 신청 접수 → ③ 자료구입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진위여부와 구입여부 및 가격 결정 → ④ 구입대상 자료 확정 및 온라인 공개 → ⑤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진행됨.

헌정자료 공개구입은 온라인 공고를 통해 문화재 매매업자, 개인소장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어 다양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나, 매도 신청 자료의 수량과 구입액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은 수장고 조성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연 1회 공개구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 처음으로 연 2회

15)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료 구입은 지정구입(담당자가 직접 구입업체와 매도 대상자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박물관 전면개편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해 2021년 자료구입 예산이 증가(1천만원→1억 1천만원)함에 따라 국립박물관의 공개구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설명임.

공개구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자료구입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경매구입을 시도하는 한편 구입 회차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집행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회박물관의 전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 자산취득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다양한 헌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헌정자료 수집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취득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7. 연수활동지원(2031-306)

가. 개 요

「연수활동지원」 사업은 시민의정연수,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과정, 의정인적역량강화, 고성연수원 민간근로자 운용, 고성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 등 의정연수원의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3,200만원(4.8%) 증액된 5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연수활동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3,943	4,874	5,106	232	4.8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시민의정연수 4억 3,100만원, ②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4억 6,900만원, ③ 의정인적역량강화 7억 2,600만원, ④ 고성연수원 민간근로자 운용 22억 5,500만원, ⑤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9억 8,400만원, ⑥ 고성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 2억 4,100만원 등임.

나. 고성연수원 안전강화 사업 소요 예산 반영 필요

‘고성연수원 운영·관리’는 국회고성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연수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14억 7,300만원 대비 4억 8,900만원(△33.2%)이 감액된 9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1,057	1,028	1,473	984
- 일반수용비 (210-01)	86	86	86	8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55	316	278	271
- 피복비 (210-03)	17	16	17	16
- 임차료 (210-07)	65	46	65	46
- 유류비 (210-08)	98	62	98	6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04	124	134	124
- 재료비 (210-11)	20	19	20	19
- 일반용역비 (210-14)	213	172	183	172
- 일반연구비 (260-01)	7	7	54	8
- 실시설계비 (420-02)	-	-	18	-
- 공사비 (420-03)	59	55	387	55
- 자산취득비 (430-01)	133	125	133	125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고성연수원은 숙박형 연수시설로서 적시성 있는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고,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안전강화 및 에너

지절감사업' 세사업이 신규 편성(3억 4,600만원: 공사비 3억 2,800만원, 실시설계비 1,800만원)되어 ① 건물 외벽 도색, ② 방재림 조성 및 ③ 연수원 내 계곡·절개지 안전난간 및 데크 설치 등 작업이 진행 중임.

그러나, 2025년도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예산안에는 동 세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건물안전 보강 및 산불 피해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수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 미흡의 우려가 있음.

국회사무처는 고성연수원의 경우 폭우·폭설 및 대형산불이 빈번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건물 개보수 수요가 크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설명으로, 동 사업은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방재용 생태연못 조성 등의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법정 의무사항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일반연구비 반영 필요

「기계설비법」 제17조¹⁶⁾,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매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됨.

2024년도 상기 규정의 시행으로 국회 고성연수원은 2024년도의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4,600만원을 활용하여 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관련 비용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성능점검의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고 있음.

국회고성연수원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연수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한 일반연구비 적정 소요액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⁷⁾.

16)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7)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별표 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현장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한 기준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600만원의 일반연구비 예산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라. 고성연수원 공공요금 사용량 관리 및 적정예산 확보 노력 필요

‘고성연수원 운영·관리’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고성연수원에서 사용되는 전기·상하수도·전화요금 등의 집행을 위한 항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7백만원 감액된 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고성연수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소요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예산액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 2억 5,500만원 대비 6,100만원이 초과된 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의 경우 예산액은 2억 7,800만원이고, 9월말 기준 집행액은 2억 6,100만원이며, 국회사무처는 공공요금의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예산액 대비 6,800만원이 초과된 3억 4,600만원을 연내 집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연도별 고성연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부족액
고성연수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21	250	186	△64
	2022	250	250	-
	2023	255	316	61
	2024	278	261 (9월말 기준)	(68*)

자료: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는 2024년도 집행예상액을 346백만원, 부족예상액을 6,800만원으로 추산함.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소요의 증가는 코로나-19 해제로 연수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의 인상¹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 예산안이 금년 대비 7백만원 감액 편성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국가재정법」 제47조 및 예산총칙¹⁹⁾ 등에 따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된 예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이용제도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고성연수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기·수도 등의 절약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요금 사용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에는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18) 전기요금 인상 추이 kWh당: ('22)137.9원 → ('23)173.5원 → ('24)175.9원

19)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3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 11. (생략)

8. 의회경호및방호(2031-310)

가. 개 요

「의회경호및방호」사업은 회의장 질서유지, 청사 보안 등 의회 경호·방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둔치주차장 등 국회경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6억 6,500만원 증액(31.9%)된 6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의회경호및방호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3,862	5,212	6,877	1,665	31.9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등 청사 보안시설 개선 21억 9,400만원, ② 청사 경비인력 운용 21억 7,700만원, ③ 의회경호 및 방호 운영 8억 4,400만원, ④ 국회 출입제도 개선 6억 2,700만원, ⑤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신규) 2억 3,300만원, ⑥ 도청탐지시스템 개선(신규) 1억 400만원 등임.

나. 국회 CCTV 관제 및 방호·안전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필요

‘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등 청사보안시설 개선’은 국회 경내에 설치된 771대의 CCTV를 효과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노후 모니터링 장비 교체 및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도서관-의정관 연결통로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임.

이 중 ‘본청 상황실 지능형 CCTV 시스템’은 고화질 CCTV로 실시간 수집되는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특정 이상행동 패턴(배회, 침입, 쓰러짐, 화재 등)을 인식하여 모니터에 경고 신호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도 동 시스템 구축 예산안은 13억 5,400만원이 편성됨.

[본청 상황실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역		예산안
본청 상황실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영상분석 서버	290,000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563,040
	영상분석 운용서버	13,450
	모니터링 운용서버	203,450
	모니터	6,300
	랙	4,000
	전원공급장치	1,700
	컴퓨터망 전환장치	3,100
	백본 스위치	65,200
	네트워크 스위치	31,200
	무정전 전원장치	164,560
	조달 수수료(0.54%)	7,710
	합 계	1,353,710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동 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하여 인력 위주의 방호·보안시스템을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사방호·보안을 강화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사업비 320억원(연구개발출연금)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²⁰⁾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I CCTV 통합관제와 이동형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을 통합적으로 연동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신개념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구축하게 될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은 국회의 방호·안전관리에도 접목·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국가 재정투입의 효과성 확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지능형 CCTV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CCTV 관제 및 국회 방호·안전관리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R&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 경호대상자 및 국가요인에 대한 신종 위협 대응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경비 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異機種)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연구개발출연금, 360-05)을 각각 160억원씩 분담함.

다.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 방문인 주차 할인제도의 효율적인 적용 방안 검토 필요

‘국회출입제도 개선’의 세사업으로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신규) 예산안 5억 1,700만원(공사비, 420-03)이 편성되었음.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와 점용협의를 거쳐 국가 하천구역인 국유지에 국회둔치주차장(주차면 1,050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본요금(30분) 2,000원 및 10분당 300원을 부과하고, 1일 최대 부과한도는 15,000원임²¹⁾.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둔치주차장 이용료를 무인결제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전자출입시스템과 연동하는 사업으로,

기존 유인결제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① 정산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세입 누수, ② 심야시간 무단 주차 및 목적 외 주차장 이용에 대한 관리 곤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주차요금 징수 가능 시간 범위의 확대²²⁾, 심야시간 주차장 관리 강화 및 공영 주차장에 적용

21) 국회 둔치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에 따르면, 국회청사 상주근무자 및 국회상시출입기자는 주차장 이용요금이 무료이고, 국회방문인은 국회소속기관 확인 시 2시간 무료이용이 가능함.

22) 현재 08:00~21:00에서 06:00~24:00까지 5시간의 징수시간 확대

되는 요일제, 다둥이, 친환경 및 장애·국가유공자 대상의 주차할인·정산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정산 등에 있어 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주차 관리 인력²³⁾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회사무처는 업무목적의 방문인에 대한 2시간 무료주차 등의 제공을 위하여 ‘터치·무인방식의 바코드 할인권 발급기’ 9대를 본관, 의원회관 등 청사 내 곳곳에 배치할 계획임.

[2025년도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무인정산시스템	무인정산기	60,600	
	사전 무인정산기	57,600	
	할인권 발급기	43,000	- 터치·무인 바코드 할인권 발급기 (본관, 의원회관 등 청사 내 9대) - 강변서재 영수증 연동 발급기(1대)
	둔치관리사무실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13,200	실시간 출입관리 모니터링 관제
	둔치 정·후문 4면 촬영시스템	31,200	출입차량 4면 촬영시스템 정문(2대)·후문(2대) ※차량파손 감시용
	기타 관제용 설비 등 (차량번호인식기 포함)	79,510	65"모니터(1대), 관제용PC(2대) 주차DB서버 S/W개발 등
	노무비	22,050	설치 및 시험조정
	부가세	30,716	※ 10% 적용
	소 계	337,878	

23) 국회사무처는 무인정산시스템 도입(2025년도 하반기 예정) 후 주차관련 인력(현행 8인의 공무원근로자로, 관리소장 1인/ 주차정산요원 3인/ 주간야간 주차관리요원 4인으로 구성) 중 주차정산요원 2인을 퇴직자 등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구 분		금 액	비 고
전 자 출 입 시 스 템	운영서버	8,580	※ 의원회관 상황실 내 구축
	통신 컨트롤러	5,480	
	출입 컨트롤러	5,480	
	카드리더기	2,920	
	주차관제 연동 S/W개발 등	18,200	
	기타 관제용 설비 등	53,016	
	노무비	70,000	
	부가세	16,368	※ 10% 적용
	소 계	180,044	
합 계		517,000	

자료: 국회사무처

현재 국회 방문인에 대한 방문증 교부 시 방호 담당자가 개별부서나 의원실 등과 유선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증 반납 시에 무료주차 확인증을 발급해오고 있던 것을 무인화·자동화함으로써 편의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별부서나 의원실 등에서 방문인을 전자적으로 등록·조회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방문인 등이 무인 바코드 할인권 발급기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할인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 주차할인제도의 오·남용 및 세입 누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방문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가. 개 요

「입법서비스지원활동」은 법률체계 및 법제기준 연구, 입법제안네트워크운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입법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액인 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입법서비스지원활동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810	734	734	-	-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① 법률체계 및 법제기준 연구 1억 800만원, ② 입법제안네트워크 운영 5,600만원, ③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3,500만원, ④ 입법서비스 개선 4억 7,700만원, ⑤ 행정입법 분석 및 평가 5,800만원 등임.

나. 법제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예산 증액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는 지역현안의 입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과 법제관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 등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관련한 전문가, 법제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임²⁴⁾.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도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로 상당기간 토론회 개최가 제한되고²⁵⁾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실질적인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액 6,200만원 대비 2,700만원 감액된 3,500만원(5회 기준)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 예산안
	예산 (A)	결산	예산 (B)	B-A	
지역현안입법지원토론회 (개최건수)	62	51 (7회 실시)	35 (5회 기준)	△27	35 (5회 기준)

*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또는 관련 내규에 따라 토론회 개최실적이 없었으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전(그 밖의 선거는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토론회 개최가 불가하였음 (해당 기간: 2021.12.9.~ 2022.6.1. 및 2023.10.13.~2024.4.10.)

24) “입법지원 토론회”란 지역현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등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관한 발표 및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2조).

25)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전(그 밖의 선거는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토론회 개최가 제한됨 (최근년도 해당 기간: 2021.12.9.~ 2022.6.1. 및 2023.10.13.~ 2024.4.10.)

2025년도의 경우 토론회 개최 제한기간이 없어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에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매월 1회 개최²⁶⁾가 가능하고 의원실의 수요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소요 대비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11월 현재 기준 2025년에 개최 예정인 5회의 토론회 개최 신청 접수가 이미 완료되는 등 의원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2023년도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연중 7건의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점, 최근 국회사무처가 관련 내규 개정(2024.5.4.)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와 법률안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안내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의원입법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 소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로의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5조(개최횟수) ① 토론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전이나 그 후의 달
2.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개최신청서의 건수를 고려하여 국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

가. 개 요

「국회청사유지및관리」는 국회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시설물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5억 3,100만원 증액(12.8%)된 57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45,213	50,969	57,500	6,531	12.8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공무원직근로자 운영·관리 199억 6,600만원, ② 이용자 편의증진 및 환경개선 42억 3,200만원, ③ 시설·설비 안전관리 강화 45억 5,800만원, ④ 탄소중립 국회 조성(신규) 40억 6,100만원, ⑤ 청사관리 운영비 140억 2,900만원 등임.

나. 전기차 화재 대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필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 화재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2024.9.6.)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향후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²⁷⁾’ 설치가 의무화 되고,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구축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를 열 감지기에서 연기 감지기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표준반응형에서 조기반응형으로 교체하는 등의 성능개선이 권고됨.

국회 청사(의원회관, 의정관, 소통관 및 박물관) 지하주차장에는 현재 열 감지기와 표준반응형 헤드로 구성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²⁸⁾’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습식 스프링클러는 배관에 소화수가 상시 채워져 있어 화재 시 열을 감지하여 즉각 살수되므로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평상시 배관을 비워두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유리한 대신 화재 감지 후 소화수 살수에 일정시간이 소요됨.

정부의 권고사항과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작동이 화재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 전문가 의견²⁹⁾ 등을 고려할 때, 국회사무처는 청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 개

27) 자동경보밸브를 중심으로 1,2차측 배관이 소화수로 유지되어 화재 시 열에 의한 헤드의 개방으로 살수되어 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음.

28) 준비작동식 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은 소화수, 2차측은 대기압 상태이나 화재발생시 감지기 작동 후 2차측에 충수된 후 헤드개방시 살수되는 방식으로, 헤드 개방전 화재경보로 조기 대처가 용이하고 동결 우려장소에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2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2024.9.6

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동 사업에 관련 예산액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⁰⁾.

30) 국회사무처는 스프링클러 설비감지기와 헤드 교체에 4억 8,700만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임
- 공사비 (420-03) 4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420-05) 2백만원

11.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가. 개 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은 정보자원의 통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안관계 통합을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며 위기 발생 시 자료유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합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26억 1,300만원 대비 13억 700만원 증액(50.0%)된 3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	2,613	3,920	1,307	50.0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개요]

• 건립목적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국회 통합데이터센터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 이미지 제고 및 소통창구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열람실 및 전시관 등을 포함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로 추진
• 건립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갑천호수공원 부지
• 주요시설 : 국회 통합데이터센터, 디지털체험·전시관, 디지털열람실 등
• 시설규모 : 연면적 8,609㎡(2,604평), 지하 1층 및 지상 4층
• 총사업비 : 505억 5,300만원

자료: 국회사무처

나.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21년 ~ 2024년간 총사업비 467억 7,900만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선시공분 공사³¹⁾ 업체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업 착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후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³²⁾에 따른 타당성재조사가 시행(한국개발연구원)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경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01. ~ 05.: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1. 06.: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21. 06. ~ 08.: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2021. 08. ~ 09.: 입찰안내서 보완 및 심의- 2021. 10. ~ 2022. 01.: 입찰공고- 2022. 01. ~ 05.: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2022. 06. ~ 08.: 우선시공분 공사 가격협상(결과 : 결렬)- 2022. 08. : 입찰방법 변경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2022. 09. ~ 10.: 타당성재조사 심의자료 제출 및 총사업비 조정 요청(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 2022. 10.: 타당성재조사 시행 요청(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2.10 ~ 2024.1. : 타당성재조사 시행(한국개발연구원)- 2024.1 ~ 2024. 9. : 기획재정부 - 국회사무처 총사업비 협의 |
|--|

자료: 국회사무처

31) 우선시공분 공사는 본 공사 착수에 앞서 하는 가설공사, 부지조성공사(토공사, 터파기공사 등)를 의미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서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임

3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국회사무처는 타당성재조사 완료 이후 2024년도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였고, 총사업비는 당초 467억 7,900만원에서 505억 5,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최종 조정되었음. 2024년 10월 현재 국회사무처는 2024년도 설계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³³⁾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을 진행 중임(2024년도 설계비 등 26억 1,300만원).

2025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안은 건립부지를 대상으로 한 건설보상비 35억원 및 감리비 4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안 내역]

- | |
|---|
| - (내용)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 - (내역) • 건설보상비 3,500백만원 |
| • 감리비 414백만원 |
| • 실시설계비 6백만원 |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국회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험·연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금년도 추진 중인 설계공모 및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과 예산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33) <공모일정 공고>

- 참가등록 : ~ 10.29(화) 18:00
- 질의접수 : ~ 2024. 11. 1(수) 18:00
- 공모안제출 : 2024. 11. 19(화) ~ 20(수) 18:00
- 작품심사 : 2024. 12. 3(화) 14:00

12. 국회방송운영(2036-300)

가. 개 요

「국회방송운영」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500만원 감액(△1.2%)된 17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방송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14,743	17,244	17,039	△205	△1.2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① 프로그램 직접제작 37억 5,700만원, ② 방송시스템 임차 29억 4,400만원, ③ 외주제작 19억 4,300만원, ④ 프로그램 구입 5억 3,100만원, ⑤ 방송국 운영경비 등 16억 5,000만원, ⑥ 민간근로자 인건비 등 36억 800만원, ⑦ 장애인 시청지원 12억 8,200만원 등임.

나. 제작 편수 증대를 위한 인력·장비의 효율적인 배차·활용 방안 수립 필요

국회 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은 직접 제작, 외주 제작 및 구입 등으로 구분됨.

직접 제작은 의사·의정 중계를 포함한 생방송 뉴스, 토론 프로그램 등 국회방송 자체 인력·장비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제작권역이 넓은 경우와 같이 인력·장비·기간 등 여건의 한계로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를 보완하거나 편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 제작이나 구입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2025년도 국회방송운영 사업의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외주 제작 및 구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직접 제작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직접 제작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0억 5,300만원(38.9%) 증액된 37억 5,700만원, 외주 제작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0억 2,400만원(△34.5) 감액된 19억 4,300만원, 구입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억 1,200만원(△49.1%) 감액된 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됨.

[프로그램 직접·외주제작 및 구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B-A	(B-A)/ A
• 프로그램 직접제작	2,479	2,704 (40.3)	3,757 (60.3)	1,053	38.9
• 프로그램 외주제작	2,639	2,967 (44.2)	1,943 (31.2)	△1,024	△34.5
• 프로그램 구입	1,043	1,043 (15.5)	531 (8.5)	△512	△49.1
소 계	6,161	6,714 (100.0)	6,231 (100.0)	△483	△7.2

자료: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I-1」, p342를 재구성

이에 따라 국회 방송국이 내년도에 직접 제작하여야 하는 프로그램 편수는 1,345편으로, 이는 2023년도 제작편수인 814편 대비 65.2%, 2024년도 예산상 계획편수인 962편 대비 39.8%가 증가한 수치임.

[프로그램 직접·외주제작 및 구입 편수 현황]

(단위: 편, 백만원)

구 분	직접제작		외주제작		구 입	
	편수	소요액	편수	소요액	편수	소요액
2023 결산	814	2,742	198	2,809	311	949
2024 예산	962	2,704	262	2,967	411	1,043
2025 예산안	1,345	3,757	203	1,943	271	531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방송이 공공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정 관련 뉴스 및 입법현안 토론 프로그램 등 국회방송 자체 제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내년도 직접 제작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작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국회방송의 직접 제작 편수 확대와 더불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계획 및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및 장비의 확충 등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도서관

I.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도서관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5년도 국회도서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772억 8,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3억 4,700만원($\Delta 1.7\%$)이 감액됨.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및 단가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4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사회복지무요원 운영 등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이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4년: 35억 원 → 2025년: 5억 원) 등에 따라 주요사업비 예산이 19억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출	78,636	77,289	$\Delta 1,347$	$\Delta 1.7$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2025년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올해 대비 1.6% 증액된 316억 7,900만원,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3.1% 증액된 23억 6,700만원,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4.2% 감액된 432억 4,3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31,191	39.7	31,679	41.0	488	1.6
기 본 경 비	2,296	2.9	2,367	3.1	71	3.1
주요사업비	45,149	57.4	43,243	55.9	△1,906	△4.2
합 계	78,636	100.0	77,289	100.0	△1,347	△1.7

주요사업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도서관운영관리」는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회부산도서관운영」은 4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자도서관운영」은 24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증 감	%	주요 증감 내역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0,770	11,770	1,000	9.3	
· 도서관기획및운영	1,049	1,061	12	1.1	· 기획 및 홍보자료 발간(12)
· 입법자료지원	600	632	32	5.3	· 의회정보자문단 운영(12) · 인공지능서비스 구독료(20)
· 법률정보지원	683	792	109	16.0	· 외국법률 번역 감수(100)
· 도서관자료확충	5,178	5,928	750	14.5	· Web-DB 사용료(495) · 온라인자료 납본(238)
·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2,199	2,130	△69	△3.1	·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53)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24) · 서고 모바일 등 운영(△159)
· 국회기록물관리	1,061	1,227	166	15.6	· 국회 관련 의정활동 기록물 조사·발굴 및 해제 등(150)
국회부산도서관운영 (3031-301)	2,928	2,447	△481	△16.4	· 자료 구입·정리(△150) · 열람 및 전시공간 조성(△252)
전자도서관운영 (3035-500)	31,451	29,026	△2,425	△7.7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90) · 전자도서관 시스템(71) ·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136) · 국회도서관 자료관리 업무지원시스템(153) · 학술연구자정보 관리공유시스템(△132) · 의회·법률정보시스템(△68) · 국회기록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384) - 일반연구비(366) · 국회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126)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87) ·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3,000) - 일반연구비(△2,600)
합 계	45,149	43,243	△1,906	△4.2	

Ⅱ.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가. 개 요

「도서관운영관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국회도서관의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07억 7,000만원 대비 10억원(9.3%)이 증액된 117억 7,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도서관운영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도서관운영관리	9,685	10,770	11,770	1,000	9.3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① 도서관기획및운영 10억 6,100만원, ② 입법자료지원 6억 3,200만원, ③ 법률정보지원 7억 9,200만원, ④ 도서관자료확충 59억 2,800만원, ⑤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21억 3,000만원, ⑥ 국회기록물관리 12억 2,700만원임.

나. 외국법률 번역·공개 절차 변경 검토 필요

현재 국회도서관은 외국법률을 번역하고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외국법률 번역·공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법률 번역·공개 사업 예산은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210-01)와 외국법률 번역(210-1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외국법률 번역·공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5억 1,300만원 대비 1억원(19.5%)이 증액된 6억 1,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외국법률 번역·공개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일반수용비 (210-01)	○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 ※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단가 현실화 및 미감수 물량 감수를 위한 예산 증액 (‘24: 20,000원×3,840면→’25: 22,000원×8,040면)	177
일반용역비 (210-14)	○ 외국법률 번역 (30,000원×14,548면)	436
계	-	613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동 사업의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법률 번역³⁴⁾은 번역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법률 번역자료

34) ①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이 요청한 외국법률과 ② 외국법률자문단 등 법률전문가가 추천한 외국법률 및 자체 선정한 외국법률을 번역 대상으로 함.

감수는 각급법원 소속 판사,³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번역 주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감수자로 선정하여 감수를 의뢰³⁶⁾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외국법률 번역 예산 집행 현황 및 번역 실적]

(단위: 천원,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0.
예산액	436,484	436,484	436,484	436,484	436,484
집행액	435,898	436,404	436,479	436,484	280,085
번역 실적	335	340	330	318	285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최근 5년간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 집행 현황 및 감수 실적]

(단위: 천원,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0.
예산액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집행액	76,748	76,755	76,799	76,796	34,692
감수 실적	113	89	83	69	3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35) 국회도서관은 법원도서관과 「법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간의 외국법령정보 등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감수자 선정 및 감수에 협력하고 있음.
「법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간의 외국법령정보 등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 제4조(감수) 국회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외국법령 데이터베이스의 번역물에 대한 감수에 협력한다.

36) 외국법률 번역자료 중 아래 기준에 따라 감수대상 외국법률을 선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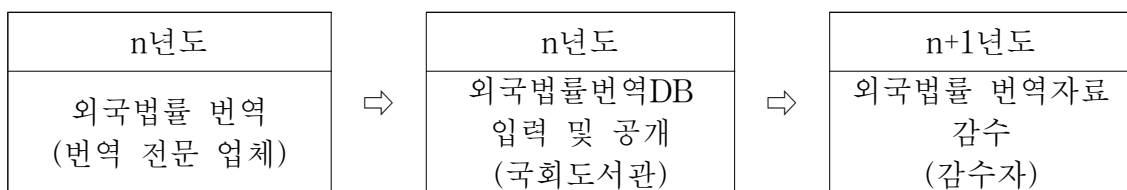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침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률
(예: 민법, 형법, 상법 및 소송법 등)
- 한국 정치·경제와 관련된 국제법이나 경제법 등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법률
- 외국법률번역DB에 수록된 가치가 있는 현안법률
- 법률(안), 규정(안), 판례, 법령해설문, 결의안 등은 제외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외국법률 번역·공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번역 전문 업체의 외국법률 번역 ⇨ ② 외국법률번역DB 입력 및 공개 ⇨ ③ 감수자의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의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어, 감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법률 번역자료가 먼저 공개되고 있음.

또한, 해당 연도에 번역된 번역자료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번역된 번역자료를 감수하고 있어, 감수되지 않은 외국법률 번역자료가 상당 기간 공개되고 있음.

[외국법률 번역·공개 과정]



[외국법률번역DB 공개 초기 화면]

외국법률번역DB

현안 관련 외국법률을 자체 번역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번역한 외국법률의 번역문 및 원어문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상세 검색](#)

■ 검색

전체항목 (목차제외)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메뉴더보기(+6) ▼

검색결과 : 전체 14,950건

제/개정일 최신순 ▼

10개씩 보기 ▼

적용

☐

인쇄

My Library 달기

1. 모자보건서비스 정책 교부금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

국가 : 미국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개정일 : 2024. 7. 12. | 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

번역문 보기

📄

번역문 다운로드

📄

원어문 보기

📄

원어문 다운로드

📄

목차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외국법률의 최신성·시의성·적시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감수 전에 외국법률번역DB에 입력·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번역 전문 업체의 외국법률 번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전문가 감수 과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번역된 외국법률의 신뢰성·정확성·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이나 기본법 등 최신성보다 신뢰성이 보다 중시되는 외국법률의 경우에는 감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외국법률번역DB 공개 초기 화면에서는 공개 외국법률을 법령명의 가나다순, 제·개정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법률에 대한 접근성·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상임위원회 별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⁷⁾

37) 다만, 상세검색 기능을 통하여 법령명, 제·개정일, 국가, 주제, 상임위원회 등의 검색이 가능함.

다. 집행실적을 고려한 의회정보자문단 적정 예산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2020년 5월 「의회정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팩트북 등 자료 발간, 의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방의회와의 지식정보 공유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자문 또는 감수를 수행하는 ‘의회정보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2025년에는 별도로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정보자문단 위원 20명, 회의 개최 횟수 2회를 적용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였음.

[2025년도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일반수용비 (210-01)	○ 의회정보자문단 자문비(참석 수당): 10 ※ 20명×25만원×2회 ○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관련 물품 구입비 등: 2	12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명 또는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평균 2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의회정보자문단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집행액	세부 내역
2020	3,049천 원	○ 회의참석비: 2,750천 원 (250천 원×11명) ○ 부대경비: 299천 원
2021	2,500천 원	○ 회의참석비: 2,500천 원 (250천 원×10명)
2022	2,871천 원	○ 회의참석비: 2,750천 원 (250천 원×11명) ○ 부대경비: 121천 원
2023	2,860천 원	○ 회의참석비: 2,750천 원 (250천 원×11명) ○ 부대경비: 110천 원

* 2024년 자문단 회의는 11월 개최 예정

자료: 국회도서관

한편, 의회정보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의회정보자문단은 내부위원인 단장(의회정보실장)과 외부위원 15명의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³⁸⁾ 참고로, 내부위원인 단장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³⁹⁾

38) 2020년 최초 구성 이후 의회정보자문단 연도별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년 의회정보자문단 회의는 11월에 위원을 재구성하여 12월에 개최할 예정임.

구 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단장(내부위원)	1명	1명	1명
외부위원	16명	14명	15명
계	17명	15명	16명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39) 「의회정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의회정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 또는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 구성 이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또는 사례금)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도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은 예산 집행 및 회의 개최 현황, 자문단 구성, 참석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온라인자료 납본 차질 없는 준비 필요

현재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⁴⁰⁾ 2025년도 예산안에 온라인자료의 납본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온라인자료 납본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손실보상금 (310-01)	○ 16,000책(=8,000종×2)×25,000원×0.5(납본보상률) ※ 전체 출판매출액 대비 전자책 매출액 비율이 약 30%로, 국회도서관 단행본 납본보상금 예산 약 6억원의 30%인 2억원을 반영 ※ 전자책 구입 평균 단가: 25,000원	200
일반용역비 (210-14)	○ 8,000건×4,763원 ※ 자료정리 용역비로 SW사업 원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	38
계	-	238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01호)를 2024. 10. 31. 가결하였고 해당 법률안은 2024. 11. 14.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⁴¹⁾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40)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은 온라인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납본받게 되는데, 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25년 5월 또는 6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온라인자료 납본보상금 예산이 확정되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더라도 법 시행 전에는 바로 온라인자료를 납본받거나 납본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즉, 온라인자료 납본보상금은 2025년 5월 또는 6월부터 6개월 또는 7개월 동안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온라인자료는 유통사를 통한 대행 납본으로 수집할 예정으로, 법 시행 전까지는 수집계획, 홍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신속히 8,000종의 온라인자료를 납본받을 계획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기한(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 준수율이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온라인자료의 납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며, 온라인자료 납본의무자가 납본의무 유무와 납본기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납본기한 준수율도 도서 및 정기간행물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도서 및 정기간행물 납본기한 준수율]

(단위: 책)

구 분		기간 내 납본(%)	기간 후 납본(%)	합 계
		30일 이내		
2022년	도서	77.2% (39,972)	22.8% (11,808)	51,780
	정기간행물	87.9% (14,144)	12.1% (1,951)	16,095
	소계	79.7% (54,116)	20.3% (13,759)	67,875
2023년	도서	79.7% (45,784)	20.3% (11,634)	57,418
	정기간행물	91.5% (13,776)	8.5% (1,278)	15,054
	소계	82.2% (59,560)	17.8% (12,912)	72,472
2024년	도서	80.2% (32,828)	19.8% (8,086)	40,914
	정기간행물	88.5% (9,719)	11.5% (1,263)	10,982
	소계	82.0% (42,547)	18.0% (9,349)	51,896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온라인자료 납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자료 납본보상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 납본 수집계획 수립, 온라인자료 납본의무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온라인자료 납본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마. Web-DB 구독 분야 다양화 및 종수 확대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내 및 해외의 의회·법률·학술 분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Web-DB(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음.

2025년도 Web-DB 사용료 예산안은 올해 예산 8억 2,200만원 대비 4억 9,500만원(60.2%) 증액된 13억 1,700만원이 편성됨.

[Web-DB 사용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Web-DB 사용료 (210-02)	822	822	1,317	495	60.2

2024년 9월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은 36종의 Web-DB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2025년에 6종의 Web-DB를 신규로 구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5년도 Web-DB 사용료 예산이 올해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었음.⁴²⁾

[최근 5년간 Web-DB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구 분	Web-DB 명	집행액				
			2020	2021	2022	2023	2024

42)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신규 Web-DB 구독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Web-DB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주제적합성, 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연 번	구 분	Web-DB 명	집 행 액				
			2020	2021	2022	2023	2024
1	국내	KSDC	3,130	3,130	3,130	3,250	3,376
2		인물검색(조인스)	19,360	19,360	19,360	19,360	19,360
3		조선일보 아카이브	3,450	1,581	3,795	3,850	3,927
4		동아일보 아카이브	3,450	1,581	3,795	3,850	3,927
5		인포맥스	6,316	6,316	6,316	6,316	-
6		KISS(한국학술정보)	36,550	36,550	36,550	37,281	38,027
7		DBPIA	51,000	52,530	62,988	63,013	65,413
8		LawnB	13,283	17,682	22,436	24,372	24,372
9		삼일아이닷컴	4,620	4,620	6,050	4,620	4,620
10		모아진	10,500	8,100	18,000	10,800	10,800
11		e-article	17,000	8,500	17,000	17,000	17,000
12		통계뱅크	-	-	-	-	4,000
13	국외	JSTOR	9,994	9,406	9,768	11,113	11,740
14		Westlaw Next	32,240	30,899	36,018	40,391	40,468
15		Hein Online	9,914	9,406	10,356	11,497	11,860
16		ICPSR	4,806	4,538	6,968	8,273	8,339
17		ScienceDirect	86,751	-	-	-	-
18		NBER Working Papers	3,447	3,374	3,667	4,272	4,665
19		BeckOnline	12,758	13,314	13,230	13,752	14,721
20		북대법보	8,306	3,568	9,117	8,863	9,374
21		ProQuest Statistical Insight	6,675	6,425	7,187	7,473	8,206
22		ProQuest Congressional	6,843	6,586	7,231	7,519	8,256
23		TKC Law Library	13,015	7,750	17,219	16,382	15,623
24		Emerald Management 200	7,298	7,442	8,306	-	-
25		Web of Science	57,691	-	65,494	68,443	75,660
26		EBSCOhost Complete	24,840	17,298	30,784	34,107	34,759
27		ProQuest Global	59,415	40,884	58,667	61,005	66,988
28		ProQuest Central	59,406	27,966	59,094	61,449	67,477
29		Index to Foreign Legal Periodicals	4,360	-	-	-	-
30		U.S. Declassified Documents Online (전 DDRS)	3,908	1,529	3,875	3,998	4,347
31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48	422	2,057	1,916	2,076
32		Lexis Library (전 All England Law Reports Online)	7,854	-	7,854	7,854	7,854
33		China Academic Journal(CNKI)	-	31,672	33,259	33,259	16,233

연 번	구 분	Web-DB 명	집 행 액				
			2020	2021	2022	2023	2024
34		JDET	19,750	-	19,750	20,140	20,740
35		JTIC	54,450	-	-	-	-
36		Dalloz.fr	13,023	13,707	14,437	-	-
37		EIU Country Report	16,426	93,155	74,737	80,377	80,069
38		EBSCO eBook	18,519	12,974	18,468	20,081	20,465
39		medici.tv	4,950	4,950	6,655	5,995	5,995
40		ProQuest Ebook Central	15,932	7,500	15,848	16,479	18,095
41		SAGE Premier	-	28,147	32,176	34,402	36,922
42		NK Pro	-	11,447	13,289	12,849	-
43		Strada lex europe	-	-	-	4,004	-
44		Statista	-	-	-	-	28,943
합계			733,278	554,309	784,931	789,605	814,697

자료: 국회도서관

[2025년도 신규 구독 Web-DB 계획(안)]

(단위: 백만원)

연번	구 분	Web-DB명	구독료	내 용	비 고
1	의회·법령	Kluwer Law Online	35	FTA, WTO, NAFTA 등 국제자유 무역시 발생하는 통상, 중재에 관한 EU의 전략과 대책에 관한 학술DB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논문 제공	법률 정보실 요청
2		Westlaw UK	12	영국 법률 및 판례, EU 법률 정보, 법률저널 및 뉴스 제공	국회 의원실 요청
3		Oxford constitutions of the world	6	전 세계 헌법의 영문 번역 전문 및 해설자료 수록	국회 의원실 요청
4		국내 기본법 온라인 주석서	300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본법(민법, 상법, 행정법 등) 온라인 주석서	국회 의원실 요청
5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Papers	119	영국 하원 의회보고서 및 의사록	국회 의원실 요청
6	국내 학술	교보스콜라	23	전 주제 분야 국내 학술 DB로 약 5천 여종의 간행물과 3백만 개의 학위 논문 제공	국회 의원실 요청
합계			495		

자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서울대도서관 등 국내 주요 도서관에 비하여 국회도서관의 Web-DB 구독 종수 및 예산액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의 구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Web-DB의 추가적인 구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4년 주요 도서관 Web-DB 구독 종수 및 예산 현황]

기관명	구독 종수(종)			예산(천원)
	국 내	국 외	합 계	
국회도서관	11	25	36	822,000
국립중앙도서관	13	60	73	1,513,000
서울대도서관	17	115	132	12,069,000

자료: 국회도서관

다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국내 기본법 온라인 주석서’ 등 특정 Web-DB에 집중적으로 구독료 예산을 지급⁴³⁾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예산액으로 다양한 분야 여러 종류의 Web-DB를 구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Web-DB 구독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독 Web-DB 분야를 보다 다양화하여 그 종수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구독 Web-DB를 선정

43)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Web-DB는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어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 구독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시에 구독 조건, 구독 인원, 접속 환경 등을 근거로 구독료를 협상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계약 시 구독료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함에 있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 신규 사업인 지식문화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기획·운영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사업(정보봉사국 소관)에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5,3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지식문화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도서관자료보존 및열람	일반용역비 (210-14)	○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52
	특근매식비 (210-05)	○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매식비	1
계	-	-	53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등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앙홀·열람실·나비정원 등에서 연 10회에 걸쳐 다양한 지식·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지식문화프로그램 사업 내용]

- 목적: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 대상: 국회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등
- 장소: 국회도서관(중앙홀 및 열람실, 나비정원, 소회의실 등)
- 운영방법: 대면 교육
- 운영기간: 계약체결 후~11월(연간 운영), 연 10회
- 운영내용

구 분	프로그램안
대상별	○ 참가자 연령과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주제/분야별	○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문학·역사·철학·예술·법률 등
독서문화확산	○ 저자와의 북토크, 저자 세미나 ○ 체험/참여형 독서프로그램: 북아트, 책낭독, 글쓰기 등

자료: 국회도서관

한편, 국회도서관은 ‘도서관기획및운영’ 사업(기획관리관 소관) 예산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북콘서트, 북페스티벌, 음악회, 학술대회 등의 ‘문화행사’를 매년 2~3회 실시하고 있는데,

새롭게 기획된 ‘지식문화프로그램’과 기존에 실시 중인 ‘문화행사’는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 다소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도서관 이용자가 ‘문화행사’에 참여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대상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문화행사 실시 현황]

(단위: 천원)

행사일자	행사명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2020. 10. 22.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기념 행사	국회도서관 68주년 및 장서 700만권 달성 기념으로 소장중인 유일본, 귀중본 등 전시 및 도서관 관련 영웅과 명언 판넬 전시회	50,000	9,780
2020. 12. 14.	「금주의 서평」 500호 발간 기념, 북콘서트	금주의 서평 500호 발간을 기념하여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개최 *북콘서트 준비 비용 (COVID-19로 인한 중단)		1,000
2021. 11. 17.	2021 국회도서관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세계 최초 북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체험 및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50,000	15,000
2021. 12. 14.	국회도서관 2021 송년음악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속에서 뮤지션의 공연을 최신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공간 마련		20,000
2022. 2. 28.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미래로 NAL다	개관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	50,000	6,546
2022. 8. 19.	메타버스 국가전략정보센터 조성 및 전시	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 각국의 국가전략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보임으로써, 국회도서관 위상 제고 및 국내외 협력관계 활성화 도모		20,000
2022. 12. 22.	책과 음악이 있는 국회도서관 송년의 밤	2022년을 보내면서 국회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담아 공연, 북토크 개최		21,780
2023. 4. 7. ~ 4. 9.	2023 책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봄꽃 축제	코로나19로 4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여의도 봄꽃행사 기간에 책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50,000	21,945
2023. 6. 23. ~ 7. 21.	윤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윤정 김종필의 의정활동을 재조명하여 기증자의 정치철학과 의회정치 의미 반추하고자 기념 전시 개최		24,800
2024. 5. 30. ~ 6. 7.	국회개원박람회	제22대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서비스 및 발간물을 소개	50,000	21,500

자료: 국회도서관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사업(정보봉사국 소관)에서 실시하려는 ‘지식문화프로그램’은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인데 반하여, ‘도서관기획및운영’ 사업(기획관리관 소관)에서 실시 중인 ‘문화행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행사를 기획·실시하는 것으로 두 사업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국민이라면 열람증을 발급받아 손쉽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⁴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단순히 그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국민’과 ‘국회도서관 이용자’로 구별하여 사업 수행 주체를 이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지식문화프로그램이 그 기획 의도와 부합하게 기존의 문화행사와 차별성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시행하는 한편, 사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주체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4)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 제2조(열람대상자)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열람봉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사람
4.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
5.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람

사.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 예산 연내 집행 노력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에서 대전광역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내에 디지털자료 열람 공간과 디지털 전시체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일반용역비 (210-14)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공간구성 디자인 용역 1식 ※ 디자인 설계: 21,000,000원 ※ 제경비: 21,000,000원×(인건비의 5%)=1,050,000원	24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열람실 용역을 통하여 디지털열람실에 대한 공간 디자인 방향과 집기 배치 등에 대한 공간 구성 방향을 수립하고, 디지털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제시하는 것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 사업 내용]

구분	세부 사업 내용
디지털열람실 공간 디자인 방향 수립	○ 국내외 우수 도서관 디지털 열람공간 디자인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전체 공간의 디자인 방향성 제시 ○ 열람공간에 대한 통합 컬러 콘셉트 제시 ○ 이용자 서비스 이용특성 및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안 제시
디지털열람실 집기	○ 열람 좌석의 적정 수요 산출 및 다양한 형태로 배치안

구 분	세부 사업 내용
배치 등에 대한 공간 구성 방향 수립	제시 ○ 데스크 및 집기 디자인과 배치계획 설계안 제시
디지털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의 제시	○ 디지털 사이니지(홍보·안내물 디스플레이 모니터), 키오스크 등 구성 방안 마련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국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시공 및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주요 공정	추진 현황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2024. 1.
기본설계	2025. 1. ~ 2025. 12.
실시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	2026. 1. ~ 2027. 12.
착공 및 준공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자료 재구성

디지털열람실 조성 예산의 집행 가능성 및 집행 시기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면적, 공간 구획 등), 하반기에 실시설계(전기, 냉난방 등 세부 마감)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로 디지털열람실 조성을 위한 공간 디자인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국회도서관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 사업은 국회 사무처가 추진 중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에 연계·종속되는 사업으로서, 기본설계 완료시기 등 건립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공간 디자인 용역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공정 진행 상황 및 기본설계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여 디지털열람실 공간 디자인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성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 있음.

2.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가. 개 요

「국회부산도서관운영」사업은 국가지식정보의 영구보존 및 제공을 위한 보존서고 관리·운영, 국회부산도서관 열람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정리, 열람공간 및 전시공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억 2,800만원 대비 4억 8,100만원(△16.4%) 감액된 24억 4,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frac{(B-A)}{A}$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3,162	2,928	2,447	△481	△16.4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보존서고 운영 1억 5,700만원, ② 자료 구입·정리 6억 1,000만원, ③ 열람공간 및 전시공간 운영 3억 3,400만원, ④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지원 13억 4,600만원임.

나. 국회부산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 증액 검토 필요

국회부산도서관은 2022년 3월 개관 이후 열람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규자료 구입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2년도에는 5억 3,900만원,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5억 7,4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25년도는 올해 예산 대비 1억 5,000만원(△26.1%) 감액된 4억 2,400만원이 편성됨.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일반도서 구입비 (430-01)	539	574	574	424	△150	△26.1

자료: 국회도서관

2022년 3월 개관 이후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221,269명에서 2023년 338,851명으로, 2024년에는 470,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슷한 추이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는 600,000명 정도가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대출책수도 2022년 174,637책에서 2023년 322,005책으로, 2024년에는 360,000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슷한 추이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에 450,000책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됨.⁴⁵⁾

45) 2025년 예상 방문 이용자 수 및 대출책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예측치임.

[연도별 국회부산도서관 이용 현황]

(%: 2022년 대비 연도별 증가율)

구 분	이용자 수	대출책수	
	일평균 이용자 수	성인·청소년	어린이
2022년	221,269명	174,637책	
	988명	95,830책	78,807책
2023년	338,851명(153.1%)	322,005책(184.4%)	
	1,137명(115.1%)	172,465책(180.0%)	149,540책(189.8%)
2024년 (9월 30일 기준)	350,134명	268,312책	
	1,584명	151,039책	117,273책
2024년 12월말 예상*	470,000명(212.4%)	360,000책(206.1%)	
	1,599명(161.8%)	200,000책(208.7%)	160,000책(203.0%)
2025년 예상	600,000명(271.2%)	450,000책(257.7%)	
	1,643명(166.3%)	250,000책(260.9%)	200,000책(253.8%)

* 2024년말 증가율은 연말 예상치(9. 30. 기준 수치에 남은 3개월 예상치를 더한 값)로 계산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아울러, 2025년 서부산 지역(에코델타시티, 대저 등) 신도시의 단계적 개발 완료로 인한 신규 인구 유입으로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이용자 및 각종 도서관자료에 대한 정보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회부산도서관에 따르면, 2024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2025년도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으로는 2024년도 일반도서 구입 책수 28,981책 대비 8,273책이 부족한 20,708책밖에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이용자 및 정보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 및 구입 책수 현황]

(단위: 백만원, 책)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비 고
구입비 예산	539	574	574	424	△150
구입 책수	31,260	29,884	28,981	20,708	△8,273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회부산도서관이 방문 이용자 및 정보수요 증가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을 2024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열린공간 및 전시공간 조성 ICT 장비 구입 예산 적정 확보 필요

국회부산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자료의 열람 등 도서관서비스에 더하여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상설·기획 전시,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민의 예술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품격과 창의성 있는 공간디자인을 반영한 이용자 친화적 열람공간 및 전시공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ICT 장비 구입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2년도에는 2억 3,400만원, 2023년도에는 6억 2,400만원, 2024년도에는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는 순감되어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ICT 장비 구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B-A)/A
ICT 등 장비 구입 (430-01)	234	624	252	-	△252	△100

자료: 국회도서관

[ICT 등 장비 구입 내역]

구 분	구입 내역
2022	○ 이용안내 키오스크 등 9종 42대/식
2023	○ 비디오프로젝터, 미디어테이블 등 어린이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20종 62개/대 ○ LED 전광판 등 이용자공간 개선 5종 249식/개/대
2024	※ 조달청 공고 진행 중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 따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국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ICT 등 장비 구입 예산으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2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예산이 순감되었음.

국회부산도서관은 열람공간에 디지털 뮤지엄,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을 설치하여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국회 및 국회의장, 부울경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도서관 참관 안내 로봇 및 스마트 예약도서 대출기를 구입·비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ICT 장비 구입 예산(2억 5,200만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⁴⁶⁾

46) 소요예산 산출근거

따라서, 최근 3년간의 ICT 장비 구입 예산 편성 추이 및 구입 내역, 산출근거에 제시된 구입 내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수 량	단 가	합 계
디지털 뮤지엄	1식	40	40
참관 안내 로봇	1식	85	85
디지털 아쿠아리움	1식	60	60
스마트 예약도서대출기	1식	35	35
디지털 자동연주 피아노	1식	32	32
합계			252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I.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5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222억 7,9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222억 2,600만원 대비 5,300만원(0.2%)이 증액됨.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출	22,226	22,279	53	0.2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2025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4년 대비 1.0% 증액된 147억 6,5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2.3% 증액된 32억 2,5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 대비 3.7% 감액된 42억 8,900만원이 계상됨.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합 계	22,226	100.0	22,279	100.0	53	0.2
인 건 비	14,619	65.8	14,765	66.3	146	1.0
기 본 경 비	3,152	14.2	3,225	14.5	73	2.3
주요사업비	4,455	20.0	4,289	19.3	△166	△3.7

주요사업비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 감액된 3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둘째, 「예산정책처 정보화」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비 3,300만원 증액된 1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4,455	4,289	△166	△3.7
예산정책처운영관리	3,486	3,287	△199	△5.7
예산정책처정보화	969	1,002	33	3.4

Ⅱ.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

가. 개 요

「예산정책처운영관리」사업은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4개의 세부사업⁴⁷⁾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 감액(△5.7%)된 32억 8,700만원임.

[2025년도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3,461	3,486	3,287	△199	△5.7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841	966	1,041	75	7.8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1,063	1,095	961	△134	△12.2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845	762	657	△105	△13.8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711	663	628	△35	△5.3

47)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나. 실소요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비 예산 편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분석, 비용추계,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등 직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매년 정책연구비(260-02)를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에 정책연구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책연구비(3억 8,000만원)는 올해 예산(6억 6,200만원)보다 2억 8,200만원 감액($\Delta 42.6\%$)된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260-02)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소계	662	380	$\Delta 282$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218	110	$\Delta 108$
·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225	137	$\Delta 88$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219	133	$\Delta 86$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평균 7억 2,000만원 전후로 편성되었고, 평균 7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260-02)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20년	772	742	514 (69.3)	157 (21.1)	69 (9.3)
2021년	772	909	578 (63.5)	257 (28.2)	74 (8.1)
2022년	701	958	838 (87.5)	112 (11.7)	8 (0.9)
2023년	707	819	578 (70.6)	187 (22.8)	54 (6.6)
2024년 11월	662	849	381 (44.9)	-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연구비(3억 8,000만원)는 2024년 11월 현재 집행액(3억 8,100만원)과 유사하므로,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에 비추어볼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⁴⁸⁾

정책연구용역 수행 목적이 ① 경제지표 전망, ② 재정정책 효과 분석, ③ 추계모형 고도화, ④ 조사회답·비용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 직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을 실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48)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11월 현재 계약된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건까지 고려하면 연말까지 약 1억 9,000만원을 추가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며, 이에 따르면 2024년 집행액은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용역 활용 사례]

연도	연구용역명	활용 현황
2022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해외사례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재정지원 평가와 예결산 분석에 활용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모형 연구	법인세 전망 시 참고 및 비교자료로 활용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노인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조사분석 및 분석보고서에 활용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	비용추계 또는 중장기 전망에 활용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론을 활용한 GDP 예측모형 연구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치 확보
2023년	국제 통계지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연구	현행 국제통계 자료 제공상 문제점 파악,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에 활용
	해외정책 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국제 인구이동 추계	NABO인구추계 모형의 국제인구이동 추계 기초자료로 활용
	소비행태 변화가 소비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기 소비세수 전망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 전환 정책 효과 분석 시 활용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예결산 분석에 활용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신설, 인력증원에 관한 비용추계·조사분석에 활용
2024년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 비용추계,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에 활용 예정
	가계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조사분석 답변, 경제 현안분석과 거시경제전망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
	장래인구추계 장단기 모형 고도화	인구추계 작성에 활용 및 경제전망·재정전망을 위한 입력변수 산출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결과를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항목 재설계 필요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사업은 재정에 관한 국회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 예산, 정책총괄 및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매년 연말에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966	1,041	75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30	30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관운영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국가재정법」 제85조의7⁴⁹⁾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는 전반적인 만족도 및 지원서비스별 인지도·활용률·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질문지 세부항목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49)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주요 조사내용]

주제	조사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이용 빈도 및 목적	◦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 이용 빈도 ◦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 이용 목적 ◦ 국회예산정책처 접촉 경로
발간 보고서	◦ 「결산 분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예산안 분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재정사업평가 및 중장기 현안 분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재정체계 안내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조세분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재정전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경제전망 및 경제현안 분석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정기국회·국정감사 지원 보고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정기 간행물	◦ 「NABO 재정동향 & 이슈」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NABO 경제 동향」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NABO Focus」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법안비용추계 회답	◦ 법안비용추계서(지출·수입추계) 의뢰 경험 ◦ 법안비용추계서(지출·수입추계) 의뢰 절차 및 결과 평가
조사·분석 회답	◦ 조사·분석 의뢰 경험 ◦ 회답 자료 활용 방법 ◦ 조사·분석 의뢰 절차 및 결과 평가
기타 의정지원 서비스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E-mail서비스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 NABO 재정통계시스템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 ◦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개선 의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및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불만족 또는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조사항목으로는 그 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미이용 사유, 서비스 개선사항, 연구 필요주제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만족도 조사 개요]

기관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명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조사항목	-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및 미이용 사유 -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별 인지도, 이용도, 적시성, 만족도 등 -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의 활용도, 강점, 개선사항, 홍보방안 등 - 의원열람실 이용도, 만족도 등	-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인지도, 만족도, 활용도, 만족도 제고 방안 - 발간물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열독률, 보완점, 연구필요주제 등 - 입법조사처 전반적 만족도, 강화 필요 기능, 업무에 대한 의견 등
조사대상	국회의원, 보좌직원, 상임위 직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자료: 국회도서관 및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가 기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국회 소속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불만족 사유 등을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경제 안내서의 인지도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재정·조세·경제·공공기관 등 분야별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소개를 담은 재정경제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동 사업으로 일반수용비(210-01)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 안내서 발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966	1,041	75
재정경제 안내서 발간	-	100	100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조세」,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공공기관」 등 분야별 재정경제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기존 안내서에 대규모 세수결손, 국제조세 및 지방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등을 추가 보완하였음.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 안내서 발간 현황]

보고서명	면수	부수	발간 목적
대한민국 재정	752면	900부	◦ 우리나라 재정체계, 주요 재정제도 및 부처별 주요 재정사업 설명
대한민국 조세	636면	1,000부	◦ 조세의 이론적 개념, 국제·지방세 구조 및 현황, 국제조세 및 조세지출 제도 설명

보고서명	면수	부수	발간 목적
대한민국 경제	562면	1,000부	◦ 대한민국 경제 현황 설명, 경제지표를 통한 국제 비교, 주요 경제정책 소개
대한민국 공공기관	640면	900부	◦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체계 등 소개
대한민국 지방재정	313면	900부	◦ 복잡한 지방재정 제도 및 재정현황, 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최근 논의 소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재정경제 안내서(재정체계안내서)에 대한 만족도는 77점 전후로 평균 수준이나, 인지도(국회의원 78.9%, 보좌직원 81.5%)가 평균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국회의원			보좌직원		
	인지도 (%)	활용률 (%)	만족도 (점)	인지도 (%)	활용률 (%)	만족도 (점)
결산 분석보고서	92.3	78.8	76.6	93.2	81.3	77.1
예산안 분석보고서	90.7	77.3	77.6	91.8	79.5	77.8
재정사업평가 및 중·장기 현안 분석보고서	78.9	66.7	79.4	82.6	65.5	78.3
재정체계안내서	78.9	60.1	76.9	81.5	59.0	77.0
조세분석 보고서	78.4	59.9	75.6	84.0	52.1	78.0
재정전망보고서	83.0	67.7	75.5	85.1	56.5	77.6
경제전망 및 경제현안 분석보고서	84.0	74.8	76.5	87.2	57.1	78.6
정기국회·국정감사 지원 보고서	84.5	79.3	76.0	90.0	77.1	76.7
평균	83.8	70.6	76.8	86.9	66.0	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재정경제 안내서는 대한민국 재정·조세·공공기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동 보고서의 성격상 국회예산정책처만이 유일하게 발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⁵⁰⁾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보고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정경제 안내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0)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정경제 안내서 조회수는 평균 13,000건 수준으로, 대국민 차원에서는 동 보고서의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마. 재정경제통계 Brief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 직원 및 국민에게 재정·경제 통계, 국회 예·결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월평균 접속 건수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⁵¹⁾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를 2024년 6월부터 매월 1회 발간해 오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자료의 확대 발간(월 1회 → 월 2회)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재정경제통계 Brief 발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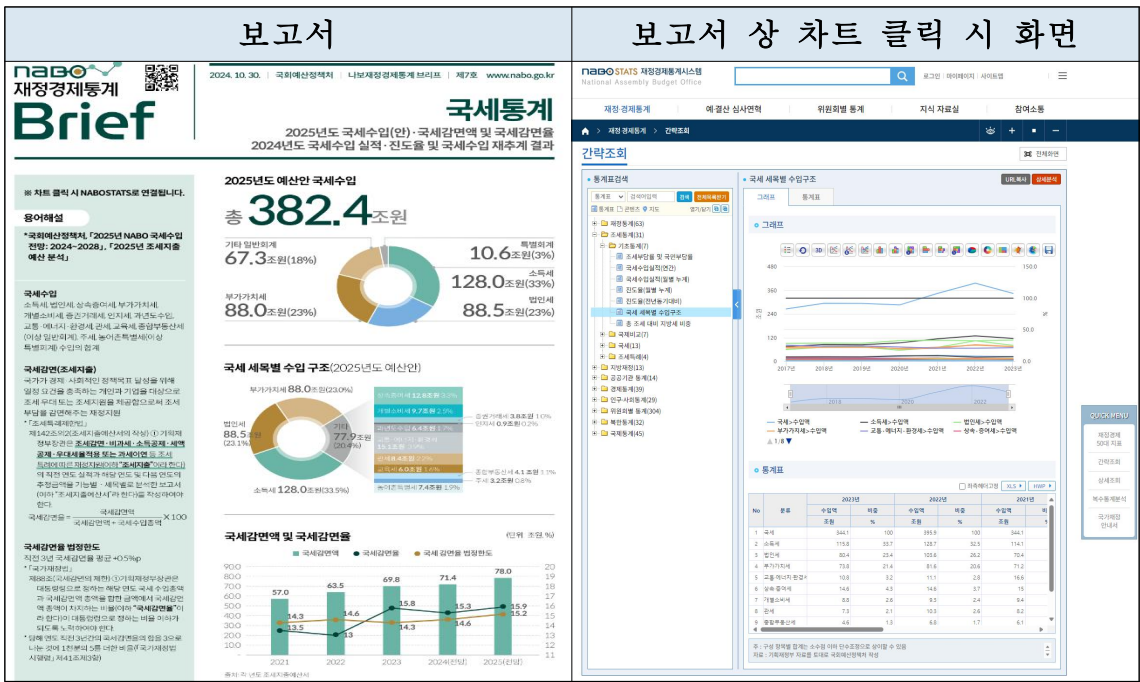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966	1,041	75
재정경제통계 Brief 발간	-	20	20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계 중 재정·경제 현안과 관련된 주요 통계값, 국제 비교 등 주요

51)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국회의원 45.9%, 보좌직원 38.4%로 평균(국회의원 55.7%, 보좌직원 56%)을 하회하는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국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동 시스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통계수치 최신화를 통한 시스템의 인지도·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사항을 숫자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로,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에는 차트를 클릭하면 재정경제통계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통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이용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를 발간물로 인쇄하여 국회의원실, 국회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음.

그러나 ① 동 발간물에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동 시스템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해당 간행물에 부착된 QR코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간행물로 연결될 뿐 원자료인 재정경제통계시스템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가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음에도, 동 시스템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에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QR코드를 통해 동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동 간행물을 발행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I.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

2. 세 출

가. 총 괄

2025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190억 4,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됨.

[2025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18,420	19,040	620	3.4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2025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2.1% 증액된 135억 6,4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9.5% 증액된 20억 4,9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5.2% 증액된 34억 2,700만원이 계상됨.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A)	구 성 비 (%)	2025년 예산안 (B)	구 성 비 (%)	증 감 (B-A)	%
합 계	18,420	100.0	19,040	100.0	620	3.4
인 건 비	13,291	72.2	13,564	71.2	273	2.1
기 본 경 비	1,871	10.2	2,049	10.8	178	9.5
주요사업비	3,258	17.7	3,427	18.0	169	5.2

주요사업비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사업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된 2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둘째, 「입법조사처 정보화」 사업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된 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258	3,427	169	5.2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262	2,441	179	7.9
입법조사처정보화	996	986	△10	△1.0

Ⅱ.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입법조사처운영관리 (5031-300)

가. 개 요

「입법조사처운영관리」사업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세부사업으로서, 2023년까지는 4개의 세부사업⁵²⁾으로 나누어져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7.9%)된 24억 4,100만원임.

52)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2025년도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355	2,262	2,441	179	7.9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359	371	376	5	1.3
총무, 기획 업무 등 기관운영	519	584	614	30	5.1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435	441	477	36	8.2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685	575	683	108	18.8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357	291	291	-	-

나.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업무의 안정성을 위한 인력운용방안 마련 필요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은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사원(RA)의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일용임금(110-04) 3억 3,800만원, 고용부담금(320-09) 3,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소계	371	376	5
· 일용임금(110-04)	333	338	5
· 고용부담금(320-09)	37	37	-

입법조사원(RA)은 입법·정책 관련 자료 등의 검색·수집 등 조사·분석 업무를 지원하거나 인사·홍보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인원으로, 2024년 11월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는 기획관리관실 4명, 정치행정조사실 4명, 경제산업조사실 3명, 사회문화조사실 4명 등 총 15명의 입법조사원(RA)이 근무 중임.

다만, 현재 기획관리관실에 근무 중인 입법조사원(RA)의 사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정리, 기구표 및 조직도 관리, SNS 채널관리, 해외기관 내방 준비, 연구보고서 발간 일정 관리, 보고서 구성안 작성·발행 등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관리관실에 근무 중인 입법조사원(RA)의 사무분장]

성명	부서	사무분장	계약기간	평균보수
A	총무	- 인사업무 지원(응시원서 정리, 면접 지원, 임용장·표창장 등 제작, 기구표 및 조직도 관리 등) - 회의장 관리 지원(유튜브 송출 시스템 지원, 회의실 예약 지원 등)	2024.1.15. ~12.14. (11개월)	월 206만원 (최저임금 수준)
B	기획협력	- 홍보업무 지원(뉴스레터 발행, 사진 촬영, SNS 이미지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 언론 지원(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기사 스크랩 등)	2024.1.15. ~12.14. (11개월)	
C	기획협력	대외협력업무 지원(보고서 영문 번역, 해외기관의 내방 준비, MOU 체결 준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준비, 영문 조직도 업데이트 등)	2024.1.15. ~12.14. (11개월)	
D	기획협력	기획업무 지원(연구 보고서 발간일정 관리, 보고서 구성안 작성 및 발행, 연구용역심의회위원회 등 회의 지원 업무 등)	2024.5.13. ~12.14. (6.5개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의 입법조사원(RA) 사용 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에 기획협력담당관실에서 정보화업무 지원을 위해 1명의 입법조사원(RA)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최소 2명 이상의 입법조사원(RA)을 매년 사용하고 있고, 그 인원도 증가하여 올해에는 4명의 입법조사원(RA)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음.

[기획관리관실의 입법조사원(RA) 사용 연혁]

연도	부서	사용인원	채용 사유
이전 연도 미운용			
2012	기획협력	1	정보화업무 지원
2013	-	-	-
2014	기획협력	2	정보화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지원
2015	기획협력	2	정보화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16	기획협력	1	기획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17	기획협력	1	기획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18	기획협력	1	기획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19	기획협력	1	기획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20	기획협력	2	기획업무 및 홍보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21	기획협력	2	기획·대외협력업무, 홍보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22	기획협력	2	기획·대외협력업무, 홍보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2023	기획협력	3	기획업무, 홍보업무(홍보담당, SNS담당) 지원
2024	기획협력	3	기획업무, 대외협력업무, 홍보업무 지원
	총무	1	인사업무 지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의 입법조사원(RA) 채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1월 현재 기획협력담당관실 현원(15명)의 40%(6명)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이며 이 중 절반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입법조사원(RA)임. 입법조사원(RA)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기획관리관실 현원에 입법조사원(RA)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획관리관실 부서별 현원 현황]

(단위: 명, 2024년 11월 기준)

부서명	직제 상 인원				직제 외 인원		계
	2급	3·4급	4·5급	6~8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입법조사원 (RA)	
총무	1	1	2	5	-	1	10
기획협력	-	1	3	5	3 ⁵³⁾	3	15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 증원⁵⁴⁾ 등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3) 기획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3인의 근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성명	직급	계약기간	계약연봉	담당업무
A	라급	(1차) 20.10.26~21.10.25	상한 58,248	홍보
		(2차) 21.10.26~23.10.25.	하한 41,551	
		(3차) 23.10.26~25.10.25		
B	라급	24.07.22~26.07.31	상한 58,248	대외협력
			하한 41,551	
C	마급	24.01.15~26.01.31	상한 51,290	학술지·학술대회·행사관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54) 다만,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관리관실 주무관 2인(홍보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2023. 2.), 동의를결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는 설명임.

다.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조사분석 회답의 내실화 필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에 비해 3,600만원 증액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소계	441	477	36
· 일반수용비(210-01)	187	258	7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
· 특근매식비(210-05)	81	81	-
· 임차료(210-07)	1	1	-
· 국내여비(220-01)	12	12	-
·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
· 사업추진비(240-01)	34	34	-
· 정책연구비(260-02)	103	6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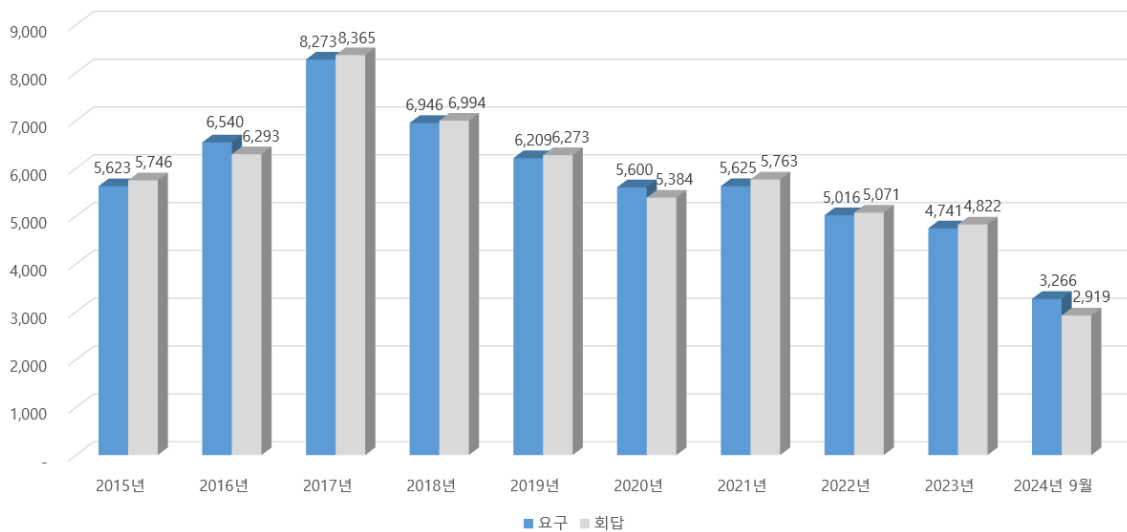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⁵⁵⁾에 따른 직무로서 기관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업무이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55)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요구건수는 2017년에 8,273건을 달성한 이후 2018년 6,946건, 2020년 5,6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4,741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2024년에는 9월 현재 3,266건이 요청되었음.

[연도별 입법조사회답서비스 요구 및 회답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및 2022년 입법조사회답서비스 통계를 재구성하여 작성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요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DB 접근성이 향상되고 Chat-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받은 회답자료에 기재된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⁵⁶⁾

56)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외부DB로 손쉽게 직접 조사·검색 가능”, “회답서비스의 신청 및 활용방법이 불편함”, “종래 회답받은 자료를 활용”, “회답서비스의 적시성이 낮음” 등이 제시됨.

이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유용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첫째,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점진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차별성’, ‘적시성’, ‘편리성’이 지적되었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의 다수가 조사회답의 전문성·충실성·적시성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는 점,

둘째,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산 또는 법률안 심사 시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하는 자료가 통계자료 등 현황보고 위주로 이루어져 국회의원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는 점⁵⁷⁾⁵⁸⁾ 등을 고려할 때,

57) 관련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10월28일))
- ○○○ 위원 사실 입법조사처가 국회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입법 관련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하면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코멘트나 보고서를 내주시면 그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중략)....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입법조사처를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번 의견들 조회하고 보고서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보고서가 올 때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요구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좀 내용이 부족합니다.(중략)....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현재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원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3년8월31일))
- ○○○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서에 기재해서 가지고 배포를 하기는 하는데 분석 측면은 조금 그렇게 심층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서....(중략)....
 - ○○○ 위원 예, 조사분석이. 그 면에서는 현황을 보고해 주는 정도에 많이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58)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에 실시한 입법조사회답을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법조사회답 중 42.2%가 사실정보제공이고 18.7%가 현황분석이었으며, 현황분석·문제점·대안제시를 전부 한 경우는 33.3%이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확대 및 정성평가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입법조사회답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구분	사실정보제공	현황분석	현황분석+문제점	현황분석+문제점+대안
비율(%)	42.2%	18.7%	5.8%	33.3%

자료: 2022년 입법조사회답서비스 통계

라.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보고서 발간 관리 강화 필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은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하고, 전문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는 사업임.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사업을 통하여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발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특징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NARS 입법·정책	기획주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심도있는 분석 및 대안 제시 (분량: 50페이지 내외)	40	40
NARS 현안분석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과제·대안 제시 (분량: 20페이지 내외)	85	85
이슈와 논점	현안에 대한 빠른 정보제공 (분량: 4페이지)	80	80
소계		205	20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이슈와 논점’은 당초 수립한 계획만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반면,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의 경우 전반적으로 발간계획 대비 발간실적이 저조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NARS 현안분석’의 계획 대비 발간률이 48.5%에 불과하였고, 2024년에는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 모두 남은 회계연도 기간에 기발간된 보고서 수만큼 발간하더라도 계획 대비 발간률이 50% 전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NARS 입법·정책’의 경우 2024년 계획치를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계획 대비 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NARS 입법·정책	31	27 (87.1%)	34	24 (71.6%)	35	23 (65.7%)	17	5 (29.4%)
NARS 현안분석	77	53 (68.8%)	61	42 (68.9%)	66	32 (48.5%)	72	15 (20.8%)
이슈와 논점	118	123 (1085%)	153	129 (84.3%)	131	130 (99.2%)	171	102 (59.6%)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3년간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의 발간 시기가 10월 이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해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조치 요구로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이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최근 3년간 발간시기별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 발간현황]

(단위: 건)

발간시기	2021년		2022년		2023년	
1/4분기(1월~3월)	5	(6.3%)	8	(12.1%)	5	(9.1%)
2/4분기(4월~6월)	19	(23.8%)	12	(18.2%)	10	(18.2%)
3/4분기(7월~9월)	8	(10.0%)	11	(16.7%)	8	(14.5%)
4/4분기(10월~12월)	48	(60.0%)	35	(53.0%)	32	(58.2%)
전체	80	(100.0%)	66	(100.0%)	55	(100.0%)

주: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 발간 건수를 합산하여 작성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거나 계획 대비 발간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보고서 발간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부터 수행 중인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은 행정부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생산하는 발간물의 과학화를 위해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 94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291	291	-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9.4	9.4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방식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2020년 55.6%, 2022년 53.5%, 2023년 50%로 절반 정도이고, 2021년에는 31.3%에 불과하였음. 2024년에도 11월 기준 집행액이 420만원(44.7%)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함.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예산(A)	14.4	14.4	14.4	14.4	9.4
결산(B)	8	4.5	7.7	7.2	4.2
집행률 (B/A)	55.6%	31.3%	53.5%	50%	44.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수립하지 않아 사업 시행 도중에 사업추진방식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사업이 시작된 2019년에는 독자적 정책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에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 분석틀을 전수받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음. 2022년에 다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는 모델이나 분석틀 대신 보고서별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그간 진행된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기관 차원의 실증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맵 구축 및 방법론 자문 등으로 사업수행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음.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추진현황	추진실적
2019년	독자적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연구 추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0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1년	독자적 정책분석모형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외부 전문가 교육 통해 적합한 분석틀 전수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단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2년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는 모델이나 분석틀 개발 대신 보고서별 새로운 방법론 적용으로 선회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3년	근거 기반의 과학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입법 영향분석 및 조사회답업무 과학화 추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직원교육 등
2024년	입법영향분석 등 분석·연구서비스 제공 고도화를 위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설치·운영	데이터맵 구축, 방법론 자문, 직원 교육 등

자료: 2023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특히, 2024년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방식을 재변경해 8월부터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업무를 ① 타부서에서 요청하는 분석설계 및 분석방법론 자문 등 지원, ②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정리, ③ 과학적 분석방법론 개발 및 교육으로 하였음.⁵⁹⁾ 11월 현재까지 동 센터는 업무분야별 데이터 맵 작성, 연구설

59) 「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4.8.13. 제정)」 제2조(기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부서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통계 조사, 분석 설계 및 분석방법론 자문 등의 분석지원
 - 가.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조사·분석 및 회답(이하 “입법조사회답”이라 한다)
 - 나.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별표1에 따른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 다.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
2.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정리
3. 과학적 분석방법론 개발 및 교육

계 및 분석방법론 자문(1건), 연구모임(2회) 및 직원교육(8회)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예정에 없던 사업방식변경 결정으로 하반기에 들어서야 동 사업이 추진되면서, 1건에 불과한 자문 횟수 및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던 직원교육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 실시한 직원교육을 수강한 입법조사관은 6명으로 조사실에 근무 중인 입법조사관(보)의 6.6%에 불과하였고 이들 중 절반은 동 사업의 수행주체인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소속이었음. 또한, 교육 수강인원(11명) 중 연구·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4명)의 비중이 36.4%에 달하는 등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의 전반적인 참여도가 저조하였음.

[2024년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 직원교육 수강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계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원(RA)			
6명	1명	3명	1명	11명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특히, 2024년 사업수행방식 변경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같은 해 연말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어,⁶⁰⁾ 동 사업의 차년도 수행방식이 재차 변경될 우려가 있음.

60) 「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4.8.13. 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부터 사업수행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경된 것은 정책 및 실증분석 모형을 고도화하기 위한 탐색·검증기간이었고, 2024년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추진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설명임.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관의 실증분석 등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가. 개 요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입	27	27	-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호봉정정 등에 따른 과년도 급여 정산금 환수금액 및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송달료 정산분 등으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과태료」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⁶¹⁾가 발생할 것을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

감안하여 편성한 것임.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도 2024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기타재산이자수입	1	1	전년동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이자정산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발생
과 태 료	5	5	전년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과태료) 조사방해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전년동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등
기 타 잡 수 입	1	1	전년동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대금 등
합계	27	27			

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24억 3,0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413억 300만원 대비 11억 2,700만원 (2.7%)이 증액됨.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①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국가인권 교육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일부 집기류 구입 비용 7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2025년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에 따라 체험관 시설 공간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용 1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화상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APF 의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1억 9,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사업(1억 2,100만원)이 폐지되었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출	41,303	42,430	1,127	2.7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6,400만원(5.1%) 증액된 218억 6,4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5,200만원(4.7%) 증액된 101억 4,7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8,900만원(△3.6%) 감액된 104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됨.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20,800	50.3	21,864	51.5	1,064	5.1
기 본 경 비	9,695	23.5	10,147	23.9	452	4.7
주요사업비	10,808	26.2	10,419	24.6	△389	△3.6
합계	41,303	100.0	42,430	100.0	1,127	2.7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증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2025년 종료되는 인권체험관 공간의 원상복구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준비를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인권의식 증진」 사업은 인권콘텐츠 제작비용 축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은 화상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셋째,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축소 등으로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음.

넷째,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사업 폐지 등으로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섯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축소로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섯째,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APF 의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일곱째,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인권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밖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 2,600만원, 「군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200만원, 「국내교류협력」 사업 700만원,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8,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백만원)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 감 (B-A)	%
총 계	10,808	10,419	△389	△3.6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45	914	△31	△3.3
○ 인권의식 증진	780	680	△100	△12.8
○ 지역인권문화 확산	165	234	69	41.8
□ 인권교육 활성화	1,945	2,667	722	37.1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945	2,667	722	37.1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3,054	2,487	△567	△18.6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423	160	△263	△62.2
○ 취약분야 인권개선	1,284	1,151	△133	△10.4
○ 장애인 인권증진	578	435	△143	△24.7
○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57	231	△26	△10.1
○ 군인권보호 및 증진	512	510	△2	△0.4
□ 인권제도 선진화	1,460	1,390	△70	△4.8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319	1,205	△114	△8.6
○ 북한인권 개선	141	185	44	31.2
□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667	1,450	△217	△13.0
○ 국제교류협력	1,450	1,240	△210	△14.5
○ 국내교류협력	217	210	△7	△3.2
□ 인권위 정보화	1,737	1,511	△226	△13.0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44	902	△142	△13.6
○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693	609	△84	△12.1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인건비(총액)(1011-250)

가. 개 요

인건비(총액)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0억 6,400만원(5.1%) 증액된 218억 6,400만원임.

[2025년도 인건비(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건비(총액)	19,872	20,800	21,864	1,064	5.1

나. 중요직무급 예산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요직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 및 성과 보상 강화를 위하여,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47명(4급 4명, 5급 16명, 6급 27명)⁶²⁾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7,100만

6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직제상 총 정원의 21%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국가위원회는 총 정원(2024. 9. 30.) 248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중요직무급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⁶³⁾		예산액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4명(4급)	200천 원×4명×12개월=9,600	54,600 (36명)
	11명(5급)	150천 원×11명×12개월=19,800	
	21명(6급)	100천 원×21명×12개월=25,200	
인권사무소	5명(5급)	150천 원×5명×12개월=9,000	16,200 (11명)
	6명(6급)	100천 원×6명×12개월=7,200	
계	47명	-	70,8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기관의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

명의 21%에 해당하는 52명 범위 내에서 격무,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군인권보호국, 인권 사무소, 예결산 담당 등)를 중심으로 47명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국가인권위원회 부서별 정원]

구 분	위원장실 총장실	기획 조정관	직속 부서	정책 교육국	침해 조사국	차별 시정국	군인권 보호국	인권 사무소	계
정원	19	23	21	54	36	30	22	43	24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63) 중요직무급 직급별 월지급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을 적용함.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이하 공무원	100,000원

정기준에 의거하여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직무 선정기준은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지급하는 행위
(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국·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요직무급을 4급·5급·6급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대통령경호처는 7급·8급·9급에게도, 대통령비서실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7급·8급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7급에게도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⁶⁴⁾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중요직무급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중요직

64) 국가인권위원회는 각목명세서상 중요직무급 예산내역의 ‘6급’은 ‘6급 이하’를 의미하므로 하위 직급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은 각목명세서상 중요직무급 예산내역에 6급 이하도 각 계급별로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대통령경호처: 6급 25명, 7급 24명, 8급 22명, 9급 21명
- 대통령비서실: 3급 12명, 4급 40명, 5급 18명, 6급 10명, 7급 12명, 8급 5명
- 공정거래위원회: 3급 5명, 4급 29명, 5급 54명, 6급 23명, 7급 5명, 8급 1명
- 법제처: 3급 9명, 4급 21명, 5급 9명, 6급 2명, 7급 1명

무는 격무, 기피, 대외 주요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 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억 9,400만원(5.3%) 증액된 78억 1,000만원임.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기관운영 기본경비	6,768	7,416	7,810	394	5.3

나.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삭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⁶⁵⁾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⁶⁶⁾는 12개의 전문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분야별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전문위원회 현황]

구 분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명목으로 12개 전문위원회별로 1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회의실⁶⁷⁾ 부

6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

67)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현황

- 사용목적: 전원위원회(월 2회), 상임위원회(월 4회), 소위원회(6개, 월 1~2회), 전문위원회(연 1~2회), 주간회의, 월간회의, 업무평가, 제안심사, 승진심사, 면접심사, 연구용역심사, 보고회 등 각종 회의 진행

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전문위원회 임차료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임차료 (210-07)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100만원×12위원회	12,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러나,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정하다고 보임.

첫째, 국회운영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2023년 1월 신설된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가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⁶⁸⁾

○면적 및 수용인원

실명	사용면적(평)	사용면적(m ²)	수용인원
전원회의실	47.11	155.46	회의석: 13 / 간사석: 4 / 보고석: 6 / 배석: 6
중회의실	21.59	71.24	회의석: 11 / 간사석: 2 / 보고석: 3 / 배석: 4
소회의실	15.21	50.19	회의석: 1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68)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지적사항	○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위원회로서 2023년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		제도개선

정보인권전문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전문위원회의 회의장 임차료 예산을 명시적으로 편성한 것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명백히 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⁶⁹⁾

둘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전문위원회가 연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문위원회별 1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상 해당 전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실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내부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일반적인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전문위원회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69)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능한 내부 회의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위원회수)	4회	3회	2회	1회	미개최
2022(11개)	-	3개	3개	5개	-
2023(12개)	2개	1개	2개	6개	1개
2024. 9.(12개)	-	-	1개	5개	6개(개최 예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회 임차료 예산은 합리적 범위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집행실적을 반영한 유류비 감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4대, 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인 업무차량 13대, 총 17대의 공용차량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현황]

연 번	구 분	차 종	소유형태	등록일
1	전용(위원장)	G80(전기차)	임차	2022. 6. 1.
2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3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4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5	업무용	K5(Hyb)	〃	2022. 2. 4.
6	업무용	아이오닉5	〃	2023. 5. 27.
7	업무용	K5(Hyb)	〃	2022. 2. 4.
8	업무용	스포티지(Hyb)	〃	2024. 3. 5.
9	업무용	스포티지(Hyb)	〃	2024. 3. 5.
10	업무용	아이오닉6	〃	2024. 9. 3.
11	업무용	카니발(Hyb) 9인승	〃	2024. 9. 13.
12	업무용(부산사무소)	아이오닉5	〃	2024. 9. 20.
13	업무용(광주사무소)	아이오닉5	〃	2024. 9. 30.
14	업무용(대구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5	업무용(대전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6	업무용(강원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7	업무용(제주사무소)	아이오닉5(AWD)	〃	2024. 9. 2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용·관리 중인 공용차량의 유류비로 금년과 동일한 4,56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유류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유류비 (210-08)	1. 본부 ○ 위원장 승용차 105,000원×1대×12월= ○ 상임위원 승용차 105,000원×3대×12월= ○ 업무용 승용차 260,000원×7대×12월= 2. 인권사무소 260,000원×1대×12월×6사무소=	45,6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유류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43.4%~76.2%, 예산현액 대비 28.0%~74.2%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동 유류비는 전년도(2022년도)에 비하여 480만원을 증액하여 4,560만원을 편성한 2023년도에는 2,05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률이 45.1%에 불과함. 또한, 금년 9월까지의 집행률도 예산액 대비 43.4%, 예산현액 대비 28.0%로 저조한 실정임.

[최근 5년간 유류비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기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C/A)	예산현액 (B/A)
2020	46,800	23,791	70,591	28,402	20,000	22,189	60.7	40.2
2021	43,200	20,000	63,200	32,919	-	30,281	76.2	52.1
2022	40,800	-	40,800	30,261	-	10,539	74.2	74.2
2023	45,600	-	45,600	20,562	25,038	-	45.1	45.1
2024. 9.	45,600	25,038	70,638	19,800	-	-	43.4	28.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도 유류비 예산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기본경비로 편성된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을 두고 있음.⁷⁰⁾

금년 예산의 경우 인권도서관 본관의 운영 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사업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이 2024년 1월 종료⁷¹⁾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인권도서관 본관의 운영 예산만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4조(도서관 주요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
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운영 종료된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소장자료는 지역 인권단체 기증(도서, 영상자료 등), 인권도서관 본관, 인권교육원, 인권사무소(내부 이용이 가능한 자료)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임.

[2025년도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세 목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210-01)	63,679	○ 자료선정 등 전문가 자문료, 상호대차수수료 ○ WEB DB 정기 구독(국내·국외) ○ 신문 구독 ○ 인권도서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인권도서관 자료회원 운영 ○ WEB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심사 ○ 견학프로그램 운영 ○ 자료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8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연회비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000	○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내여비 (220-01)	1,030	○ 인권도서관 국내 여비
자산취득비 (430-01)	121,437	○ 도서(동양서·서양서) 구입(e-book 포함) ○ 비도서 구입(영상자료 포함) ○ 연속간행물 구입(국내·국외)
계	207,02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자료구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이 주요사업비로 이관될 경우 인권도서관 장서⁷²⁾ 구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72) 인권도서관 본관 소장자료 현황(2024. 9. 30. 기준)

○ 단행본: 55,407책, 비도서: 10,817점, WEB DB: 7종, 연속간행물: 인쇄 45종/전자 818종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기본경비보다 주요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열람용 도서 구입비, WEB DB 구독, 홍보비용, 견학프로그램 운영비 등인데, 해당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행정경비’인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본경비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둘째, 기본경비는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성격의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권도서관 이용자 수, 만족도 등 인권도서관 운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셋째,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 종료로 인하여 금년에는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에 편성되어 있던 인권도서관 분관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순감되는 등 인권도서관 관련 예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의 주요사업비 이관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인권의식 증진(1031-300)

가. 개 요

「인권의식 증진」사업은 인권잡지 제작·보급, 웹진 발간,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활동과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인권작품 공모, 인권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원(△12.8%) 감액된 6억 8,000만원임.

[2025년도 인권의식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의식 증진	957	780	680	△100	△12.8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1억 2,000만원, ②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4억 8,800만원, ③ 인권작품 공모 3,200만원, ④ 인권의 날 행사 4,000만원임.

나. 인권의 날 행사 적정 소요 예산 반영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인권상 수여,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행사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2025년 인권의 날 행사 개최 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내역]

구 분	내 용
일시	2025. 12. 10.(수) 10:00~11:20(80분)
장소	미정
행사내용	기념사, 축사, 세계인권선언 기념영상,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 기념공연 등
참석자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인권위원회, 다양한 시민단체 등 약 200명
예산안 편성내역 (4,000만원)	○ 임차료(210-07): 300만원 - 인권의 날 기념식장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기획 및 연출료, 사회자 등 출연료, 기타 행사운영 경비, 행사장 및 무대 설치 ○ 사업추진비(240-01): 500만원 - 인권의 날 행사 참석자 오찬, 기념품 제작 ○ 포상금(310-03): 1,200만원 - 협조상, 공로상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 4,000만원에 1,950만원(예산액 대비 48.8%)을 자체전용·조정하여

5,9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예산액 4,000만원에 2,000만원 (예산액 대비 50.0%)을 자체전용하여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예산액 4,000만원에 2,000만원(예산액 대비 50.0%)을 세목변경하였음.⁷³⁾ 즉,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용·세목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 ·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2022년	40,000	19,500	59,500	56,200
2023년	40,000	20,000	60,000	60,300
2024년	40,000	20,000	60,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자체전용·세목변경 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사진전 및 동영상 제작, 기념행사 통·번역비 충당 등을 위하여 250만원을 자체전용하고 1,700만원을 조정하였음. 2023년도에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콘텐츠 제작(기념 영상 제작, 온라인 중계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음.

73) 2024년도는 12월 인권의 날 행사 개최 후 집행 예정임.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행사 관련 자체전용·세목변경 등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사 유
2022년 (자체전용)	2,500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만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날 행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온라인(유튜브) 중계료, 수어통역비용 지급 등의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부족
2022년 (조정)	17,000	‘인권의 날 행사’ 사진전 및 동영상 제작, 기념행사 통·번역비 충당 등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사업 일반수용비 활용
2023년 (자체전용)	20,000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기념식 행사 동영상본 제작 등 예산 부족
2024년 (세목변경)	20,000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식 관련,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기념 영상 제작, 온라인 중계 등) 예산 부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규모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25년도에도 행사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자체전용·세목변경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이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의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불필요한 전용 등은 지양하고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준수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인권의 날 행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관련 예산의 최근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전용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이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권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가. 개 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강사 양성,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7억 2,200만원(37.1%) 증액된 26억 6,7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091	1,945	2,667	722	37.1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1억 8,000만원, ②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4억 3,000만원, ③ 인권교육과정 운영 10억 6,900만원, ④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1억 6,500만원, ⑤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7억 4,400만원, ⑥ 직원 역량강화 교육 7,800만원임.

나.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일정 관리 철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공공, 시민영역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을 확대·심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개요]

- 위 치: 경기 용인시 신갈로 114(신갈동 17-7)
- 규 모: 대지 4,610㎡, 연면적 4,637.16㎡, 지상 3층~지하 1층
- 세부시설: 각종 강의실, 연구실, 토의실, 강사실, (온-오프 융합교육)스튜디오, 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정보/홍보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1년) 연장⁷⁴⁾
* 2024년 3월 공사착공, 2025년 11월 준공 예정, 2026년 개원 예상
- 예산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집 행 액 (2021~2023)				2024 예산 (현액)	2025 예산안
	2021	2022	2023	소계		
총 계	226	499	-	725	5,430	8,543
기본조사 설계비	226	-	-	226	-	-
실시설계비	-	499	-	499	-	-
공사비	-	-	-	-	4,195	7,381
감리비	-	-	-	-	1,214	1,142
시설부대비	-	-	-	-	21	2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74) 인권교육원 공사는 당초 2023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하고 2026년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감리비 재산정 요청에 따른 감리비 관련 총사업비 증액 협의(2023년 8월 완료) 및 감리사업자 선정 계약 2차례 유찰(2023년 10월 및 12월)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024년 3월에서야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준공시기도 2025년 11월로 연기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사 중인 인권교육원의 준공(2025년 11월)에 맞추어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 7억 4,400만원을 신규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 1,700만원,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비 5억 4,000만원, 사무집기류 및 정보통신류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일반용역비 (210-14)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용역비: 17	17
공사비 (420-03)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비: 504	504
자산취득비 (430-01)	사무집기류(회의실, 방재실, 당직실 등): 14 정보통신류(네트워크 연결장치, 보안서버시스템): 209	223
합 계		74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인권교육원 신축 사업은 2024년 9월 기준 구조물 해체 및 주출입구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2025년 1월까지 구조물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2025년 9월까지 각종 설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6월까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며, 2026년 3월까지 사무용집기 및 정보통신류 구매 및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2025년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및 개원 준비 공사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세부 내용
설계	2021. 12.	○ 기본설계
	2022. 12.	○ 실시설계
건축 공사	2024. 3.	○ 착공
	~ 2024. 9.	○ 구조물 해체 및 주출입구 진입로 공사
	~ 2025. 1.	○ 구조물 증축 공사
	~ 2025. 9.	○ 전기·통신·소방공사 ○ 우·오수 관로공사, 포장공사 ○ 내·외부 마감, 도장, 조경 공사
	~ 2025. 11.	○ 시운전 및 준공 준비 ○ 건축물 준공 : 2025. 11. 5.
추가 공사 등	~ 2025. 6.	○ 인테리어 기획 및 설계용역 계획 수립·발주 ○ 인테리어 설계 용역 완료
	~ 2025. 12.	○ 인테리어 공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 인테리어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6. 2.	○ 전기·통신(네트워크) 설비 공사 ○ 방송 설비 공사 ○ 사무실 이전 관련 공사
	~ 2026. 3.	○ 각종 기자재 구매 및 설치 공사
개원	2026. 상반기	○ 인권교육원 개원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9월말 기준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공정률은 10.9%로 착공 당시 예정 공정률인 22.9%보다 저조함. 추후 공정률은 각 공사 단계별 복잡도와 작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준공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13개월임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11월에 준공이 될지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정 공정률은 실제 공정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리단과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체 공사 일정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사 일정 및 준공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예정대로 2025년 11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 현장 여건 변화나 동절기 등 계절적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와 정보통신류 기기 구매 등이 지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가. 개 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사업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도모하고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인권정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국가인권통계를 생산·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1,400만원(△8.6%) 감액된 12억 500만원임.

[2025년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481	1,319	1,205	△114	△8.6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4,900만원, ②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4억 4,300만원,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4,300만원,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 5,900만원, 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6억 1,000만원임.

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⁷⁵⁾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 중 하나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제도 등 관련 권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⁷⁶⁾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모두 연구용역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에 3억 5,800만원 등 여러 세부사업에 걸쳐 총 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7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7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112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형식이 문제되는데, 조사 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보면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은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02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⁷⁾	사업명	과제명	예산	담당부서
일반 과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인권상황 실태조사(57,625,000원*6.2건)	358	인권정책과
특정 과제 (1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60	인권교육 기획과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및 이행감시체계 구축 연구	43	인권침해 조사과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방안 연구	70	사회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위한 기초연구	80	아동청소년 인권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80	아동청소년 인권과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장애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56	장애차별 조사1과
		장애인 탈시설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57	장애차별 조사2과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75	성차별 시정과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군 성고충 대응체계 운영현황 실태조사	80	군인권협력 지원과
		군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	70	군인권협력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 (1034-30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49	인권정책과
	국제교류협력 (1036-300)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방안 연구	50	국제인권과
소계(특정과제)			770	

구분 ⁷⁾	사업명	과제명	예산	담당부서
기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100	인권정책과
		국가인권 통계 조사	500	
계	-	-	1,72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실태조사 수행 주체와 관련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통계분석 등은 관련 전문 인력이 확보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77) 일반과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제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모,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현안으로 제기되는 각종 인권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특정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소요 과제를 제출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하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그러나, 실태조사란 실제의 상태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영역·분야·범위 및 대상 등에 따라 실태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자와 직접 면담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⁷⁸⁾ 중 ‘초급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과 2025년도에 수행할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성고충 대응체계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은 직접 방문 또는 면담이 필요한 실태조사로 보임.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외부전문가의 실태조사 수행 근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수

78)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도에 25개 과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수행 중임.

행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인데,⁷⁹⁾ 해당 규정들은 민간위탁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할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현재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연구용역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⁸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행 업무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⁸¹⁾에서 해당 실태조사와 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1037-500)

가. 개 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4,200만원(△13.6%) 감액된 9억 200만원임.

[2025년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16	1,044	902	△142	△13.6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6억 900만원, ②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2억 9,300만원임.

나.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매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였고 2023년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인권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최근 3년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구축 시스템
2022	일반연구비 (260-01)	264	242	22	누리집(홈페이지)
2023	일반연구비 (260-01)	253	228	25	행정정보시스템
2024. 9.	일반연구비 (260-01)	247	229	-	인권자료관리시스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억원) 및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 구축’(1억 4,000만원)을 2025년에 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 4,000만원을 내역사업인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인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예산 확보 필요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세목)	필요 사유	예산액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60-01)	○ 2026년 인권교육원 개원과 함께 다양한 인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 인권 교육원’ 구축 필요	200
국회업무자료관리 시스템 구축(430-01)	○ 2010년 도입된 국회업무처리 관리서버의 내용 연수(7년) 도과 및 서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부품이 없어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필요	140
계	-	34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집행되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 편성 추이 및 집행 현황,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억원) 및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인권정책권고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⁸²⁾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현황을 살펴보면, 90일 이내 이행계획 회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24년 9월 현재 회신율이 44.4%에 그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8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현황]

(단위: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검토 중 (90일 이내)	회 신		미회신 (90일 초과)	90일 이내 회신율
			90일 이내	90일초과		
2020	366(25)	-	87	277	2	23.8
2021	95(26)	-	35	54	6	36.8
2022	176(33)	-	70	105	1	39.8
2023	97(33)	-	53	41	3	54.6
2024	44(20)	35	4	2	3	44.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문 통지 시 이행계획 통지 의무를 정확히 안내하고 이행계획 제출 기한 내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으로 회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결정문을 통지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통지받지 못하면 유선으로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으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권고의 경우 법령 제정·개정, 예산 확보 등 중장기 계획하에서 이행계획을 도출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회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에 시간적 한계를 둔 것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이행을 독려

하려는 취지이고, 2012년 이행계획 통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회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계획 통지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제도 및 운영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이행계획 회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괄

가. 세입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입	297	297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세출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억 2,700만원(0.9%) 증액된 1,040억 2,900만원으로 편성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출	103,102	104,029	927	0.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세입예산안 내역

2025년도 세입예산안 2억 9,7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입점업체 임대료 수입으로 구성된 건물대여료(51-512)는 5,700만원,
 과년도 반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은 2억 2,000만원,
 임대건물 전기료 등 기타 잡수입(69-691)은 2,000만원으로
 각 항목 모두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건물대여료 (51-512)	57	57	-	-
기타 경상이전수입 (59-596)	220	220	-	-
기타 잡수입 (69-691)	20	20	-	-
총 계	297	297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가. 총괄

2025년도 세출예산안 1,040억 2,9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4년 예산과 동일한 433억 2,8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 예산 대비 1.3% 증액된 218억 4,0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 예산 대비 1.7% 증액된 388억 6,1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감 (B-A)	%
인건비	43,328	42.0	43,328	41.6	-	-
기본경비	21,557	20.9	21,840	21.0	283	1.3
주요사업비	38,217	37.1	38,861	37.4	644	1.7
합계	103,102	100	104,029	100	927	0.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인건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433억 2,800만원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보수(110-01)	43,000	42,958	△ 42	△ 0.1
연가보상비(110-05)	328	370	42	13.0
합 계	43,328	43,328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보수(110-01)는 2024년 예산 대비 4,200만원 감액된 429억 5,800만원,

연가보상비(110-05)는 2024년 예산 대비 4,200만원 증액된 3억 7,000만원임.

다. 기본경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300만원 (1.3%) 증액된 218억 4,000만원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금액	비율
인건비(110목)	3,709	3,799	90	2.4
운영비(210목)	10,634	10,874	239	2.3
여비(220목)	883	960	77	8.7
업무추진비(240목)	852	869	17	2.0
직무수행경비(250목)	2,950	2,963	14	0.5
보전금(310목)	204	71	△133	△65.2
민간이전(320목)	773	779	6	0.8
건설비(420목)	121	121	-	-
유형자산(430목)	1,171	1,144	△27	△2.3
무형자산(440목)	260	260	-	-
합 계	21,557	21,840	283	1.3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110목)는 2024년도 예산 대비 9,000만원(2.4%) 증액된 3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210목)는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3,900만원(2.3%) 증액된 108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220목)는 2024년도 예산 대비 7,700만원(8.7%) 증액된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업무추진비(240목)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2%) 증액된 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직무수행경비(250목)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400만원(0.5%) 증액된 2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금(310목)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300만원(Δ 65.2%) 감액된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간이전(320목)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0.8%) 증액된 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비(420목)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Δ 2.3%) 감액된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무형자산(440목)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라. 주요사업비

1) 총 괄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국정운영 지원(1131)	30,181	30,919	738	2.4
정보화(1132)	7,285	7,285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	751	657	△94	△12.5
합 계	38,217	38,861	644	1.7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억 4,400만원 (1.7%) 증액된 388억 6,100만원으로,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단위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국정운영 지원」 309억 1,900만원(2.4%, 7억 3,800만원 증)
- 「정보화」 72억 8,500만원(2024년 예산과 동일)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6억 5,700만원(△12.5%, 9,400만원 감)임.

2) 단위사업별 내역

가) 국정운영 지원(1131)

[국정운영 지원의 세부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업무지원비(1131-300)	16,943	17,428	485	2.9
국정운영관리(1131-301)	6,472	6,630	158	2.4
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	6,502	6,594	92	1.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131-304)	264	267	3	1.1
합 계	30,181	30,919	738	2.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년도 「국정운영 지원」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3,800만원(2.4%) 증액된 309억 1,900만원임.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업무지원비(1131-300)」 174억 2,800만원(2.9%, 4억 8,500만원 증)
- 「국정운영관리(1131-301)」 66억 3,000만원(2.4%, 1억 5,800만원 증)
- 「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 65억 9,400만원(1.4%, 9,200만원 증)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131-304)」 2억 6,700만원
(1.1%, 300만원 증)임.

[2025년도 업무지원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1,752	1,805	53	3.0	· 일반용역비(210-14) 5,300만원 증
특수활동비(230목)	8,251	8,251	-	-	
업무추진비(240목)	5,828	6,230	402	6.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억 200만원 증
직무수행경비(250목)	1,112	1,142	30	2.7	· 특정업무경비(250-03) 3,000만원 증
합 계	16,943	17,428	485	2.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사업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8,500만원 (2.9%) 증액된 174억 2,8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공식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 18억 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300만원(3%) 증액되었음.

특수활동비(230목)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사정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82억 5,100만원임.

업무추진비(240목)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내 각 부서별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200만원(6.9%) 증액된 62억 3,000만원임.

직무수행경비(250목)는 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000만원(2.7%) 증액된 11억 4,200만원임.

[2025년도 국정운영관리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2,964	3,067	103	3.5	· 일반수용비(210-01) 1억 1,100만원 증
업무추진비(240목)	620	636	16	2.6	· 사업추진비(240-01) 1,6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2,888	2,927	39	1.3	· 일반연구비(260-01) 3,900만원 증
합 계	6,472	6,630	158	2.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및 국민과의 소통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5,800만원(2.4%) 증액된 66억 3,0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방문객 등 기념품, 국정운영 성과 콘텐츠 제작, 대통령 친서 발송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00만원(3.5%) 증액된 30억 6,700만원임.

업무추진비(240목)는 주요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600만원(2.6%) 증액된 6억 3,600만원임.

연구용역비(260목)는 국정운영 수행평가와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정책과제 연구용역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900만원(1.3%)이 증액된 29억 2,700만원임.

[2025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2,694	2,752	58	2.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800만원 증
건설비(420목)	3,808	3,842	34	0.9	· 공사비(420-03) 8,900만원 증
합 계	6,502	6,594	92	1.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대통령실 경내·외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200만원(1.4%) 증액된 65억 9,4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대통령집무실 청사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800만원(2.3%) 증액된 27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건설비(420목)는 청사 환경개선 및 정비, 노후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400만원(0.9%) 증액된 3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234	237	3	1.3	· 일반수용비(210-01) 300만원 증
업무추진비(240목)	30	30	-	-	
합 계	264	267	3	1.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1.1%) 증액된 2억 6,700만원이 편성됨.

나) 정보화(1132)

[정보화의 세부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정보화 추진(1132-500)	7,285	7,285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년도 「정보화」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7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개 세부사업(정보화 추진)으로 구성됨.

[2025년도 정보화 추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4,700	4,700	-	-	
연구용역비(260목)	310	310	-	-	
유형자산(430목)	2,275	2,275	-	-	
합 계	7,285	7,285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보화 추진」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업무시스템 전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전산소모품 구입,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47억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2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의 세부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133-600)	751	657	△94	△12.5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년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400만원(△12.5%) 감액된 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개 세부사업(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으로 구성됨.

[2025년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317	388	71	22.3	· 관리용역비(210-15) 6,600만원 증
업무추진비(240목)	194	199	5	2.6	· 사업추진비(240-01) 5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70	70	-	-	
유형자산(430목)	170	-	△170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순감
합 계	751	657	△94	△12.5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사업」은 국가위기관리센터(상황실) 내 정보망 유지·관리 및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위기관리센터 통신망 사용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7,100만원(22.3%)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240목)는 국가안보 관련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00만원(2.6%) 증액된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형자산(430목)은 국가위기관리센터(상황실) 안전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비 구축 완료에 따라 전액 순감되었음.

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총괄 : 정책연구비(260-02) 관련

가. 개 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매년 국정운영 방향 정립 및 국제·외교·안보 정세 파악과 대응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정운영관리(1131-301)」 사업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 사업에 각각 정책연구비(260-02)를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정운영관리」 사업 내 정책연구비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5억원으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내 정책연구비 역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7,000만원으로 편성됨.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정책연구비(260-02)	506	570	570	-	-
국정운영관리	466	500	500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0	70	70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연구용역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최근 8개년 정책연구비(260-02)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이전까지는 3억원 전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도에 5억 1,3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2023년도 5억 4,000만원, 2024년도 5억 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음.

[최근 8년간 정책연구비 예산 및 집행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7년	310	101	209	32.6%
2018년	340	221	119	65%
2019년	340	212	128	62.4%
2020년	240	228	12	95%
2021년	240	60	180	25%
2022년	513	468	45	91.2%
2023년	540	506	34	93.7%
2024년	570	104	-	18.2%

자료: 각 연도별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전년 대비 예산이 급증한 2022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에도 각 부처의 정책 조율 및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년도의 경우에도 2024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 집행률(18.2%) 저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을 국가보안 등의 사유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체로 등록·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해 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한 바 있으나,⁸³⁾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2024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6건 중 PRISM에 등록·공개한 정책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2024. 11. 6. 기준).⁸⁴⁾⁸⁵⁾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정책연구용역은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연구용역 결과물의 PRISM 등록·공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비(260-02) 예산에 대한 일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3) 국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붙임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p.34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84) 참고로, 2023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15건 중 PRISM에 등록(공개)한 정책연구는 8건(2건)임.

85) 2024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관하여는 p.21 [2024년도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참조.

다. 정책연구비의 균형있는 예산집행 방안 마련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는 국가 간 전쟁, 자원확보 경쟁 등 국제정세 및 정책 여건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기민하게 이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한·미·일 협력 공고화 추진,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 구축 및 한·중 관계 관리 등 외교·안보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 과제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2024년도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구 분		과제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국정운영관리 (1131-301)	15건+@	A	2024. 3. ~ 8.	66
		B	2024. 5. ~ 7.	19
		C	2024. 5. ~ 7.	19
		D	2024. 6. ~ 9.	20
		E	2024. 8. ~ 12.	66
		F	2024. 8. ~ 11.	18
		G	2024. 10. ~ 12.	20
		H	2024. 10. ~ 12.	19
		I	2024. 10. ~ 12.	19
		J	2024. 10. ~ 12.	19
		K	2024. 10. ~ 12.	48
		L	2024. 10. ~ 12.	20
		M	2024. 10. ~ 12.	19
		N	2024. 10. ~ 12.	21
		O	2024. 10. ~ 12.	46
		[1~2건 예정]	2024. 11. ~ 12.	[61]
		하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률)		376 (75.2%)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1133-600)	2건+@	P	2024. 6. ~ 9.	13
		Q	2024. 6. ~ 9.	15
		[1~2건 예정]	2024. 11. ~ 12.	[42]
		하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률)		42 (6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추가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중으로 연내 정책연구비 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바, 이에 따라 연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반기 집행액을 산정함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운영관리」 사업을 통한 정책연구는 예산의 75.2%에 해당하는 3억 7,600만원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을 통한 정책연구는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4,200만원이 하반기에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임.

위와 같이 정책연구과제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국제 정세 및 대내·외 정책 이슈에 대한 고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계획에 따른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년도 정책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상·하반기의 정책 이슈에 고르게 대응하여 정책연구비 예산집행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정책연구비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건물대여료(51-512)

가. 개 요

‘건물대여료’는 청사 내 입점업체 임대료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건물대여료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건물대여료(51-512)	57	57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은 은행 및 구두수선소 등 입점업체 임대료 수입 예산안을 2023년 및 2024년과 동일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4년간 건물대여료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대비 3.3%인 5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5,700만원 대비 31.8%인 1,800만원, 2024년도는 7월 말 기준 예산현액 5,700만원 대비 20.8%인 1,200만원이 수납되었음.

[최근 4년간 건물대여료 예·결산 내역]

(2024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1년	202	113	113	55.9	100	-
2022년	157	5	5	3.3	100	-
2023년	57	18	18	31.8	100	-
2024년	57	12	12	20.8	100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는 은행, 매점, 구두수선소 등 업체가 입점하여 운영 중으로, 임대차 계약상 2024년도 연간 임대료는 1,188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청사 입점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사용면적(㎡)	연간이용료(천원)
A	‘23.2.13. ~ ’26.2.12.(3년)	67.67	-86)
B	‘24.7.12. ~ ’26.7.11.(2년)	6.3	962
C	‘22.5.10 ~ ’25.5.9.(3년)	78.19	10,861
D	‘23.11.22. ~ ’25.11.21.(2년)	4	58 ⁸⁷⁾
합 계		156.16	11,88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따라서, 건물임대료의 최근 정수결정액 및 수납액 실적과 2024년도 연간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8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구내매점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감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8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D업체의 경우 당초 입찰시 연간 사용료는 18,561천원이었으나, 국유재산 소상공인 감면 연장에 따라 58천원으로 감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3.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	220	220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년도 반환금⁸⁸⁾ 명목의 기타 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을 2023년 및 2024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4년간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2021년도 2,619%, 2022년도 534.2%, 2023년도 109.1% 및 2024년 9월 기준

88) 퇴직자 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판사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 기타 과년도 과오지급금 반납

357.3%로, 모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결산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1년	21	572	550	2,619.0	96.2	22
2022년	120	652	641	534.2	98.4	10
2023년	220	250	240	109.1	95.8	10
2024년	220	786	776	352.7	98.7	1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 2021년도 결산심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거 수납실적 및 내역을 고려하여 기타 경상이전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의 시정요구(주의)를 의결한 바 있음.⁸⁹⁾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세입과목 특성상(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수납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3년도 수납실적(2억 4,000만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2023년도를 제외하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로 수납하여야 할 수입을 축소 계상함이 없이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⁹⁰⁾

8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2. 11.

【붙임2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안)】 p.3

4. 기본경비(1011-200)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300만원(1.3%) 증액된 21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기본경비	19,538	21,557	21,840	283	1.3
일용임금(110-04)	78	341	341	-	-
국내여비(220-01)	308	457	400	△57	△12.5
국외여비(220-02)	702	426	560	134	31.5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집행실적을 고려한 일용임금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

기본경비 중 일용임금(110-04목)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3억 4,125만원이 편성되었음.

일용임금의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70%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9월 말 기준 3억 4,100만원 중 4,500만원(13.2%)이 집행되어 상당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90) 참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평균 징수결정액은 491백만원임.

[최근 4년간 일용임금 예·결산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20년	296	129	43.7	167
2021년	300	262	87.2	39
2022년	315	219	69.5	96
2023년	331	78	23.5	253
2024년	341	45	13.2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상반기에는 인력 소요가 한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각종 업무지원, 기록물 정리 등의 인력 소요 발생에 따라 집행액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 기록물 정리 등은 매년 발생하는 인력 소요로서 예년과 달리 특별히 소요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례금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⁹¹⁾ 및 9월 말 기준 집행실적(13.2%)을 감안하면 집행실적이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은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91)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12

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220-01)는 국내출장 및 국내 이전비를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700만원($\triangle 12.5\%$) 감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업무여비(220-02)는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숙박비 등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400만원(31.5%)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국내여비(220-01) 및 국외업무여비(220-02)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국내여비(220-01)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 또는 세목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2024년도의 경우에도 지난 9월 말 기준 본예산 4억 5,700만원 대비 집행액이 2억 4,000만원(집행률 52.5%)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고, 이 중 1억 2,100만원이 국외업무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조정(2024. 9. 11.)되는 등 국내여비를 편성함에 있어 그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과다계상 된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예·결산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본예산(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21년	541	△50	491	426	78.7%	66
2022년	507	△48	459	210	41.4%	249
2023년	507	△196	311	308	60.7%	3
2024년	457	△121	336	240	52.5%	-
2025년	400	-	-	-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둘째, 국외업무여비(220-02)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라 국외업무에 제한이 발생한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본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특히,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본예산을 초과 집행(104.5%)하였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외업무여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여비에서 세목조정을 통해 증액(1억 2,100만원)하였음.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예·결산 내역]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본예산(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21년	270	150	420	405	150%	15
2022년	253	△13	240	214	84.6%	26
2023년	276	426	702	702	254.3%	-
2024년	426	121	547	445	104.5%	-
2025년	560	-	-	-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최근 증가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인하여 아젠다 발굴, 사전 의견조율 및 순방 후속조치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국외출장 소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 물가·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요금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경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연례적으로 국내여비를 감액 조정해 국외업무여비를 증액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예산안에 각 비목별 실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통해 불필요한 이·전용과 세목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관련내용]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77

대통령경호처 소관

I.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 관

가. 세입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억 4,7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대비 1,500만원(2.8%)이 증액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입	532	547	15	2.8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세출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90억 9,8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50억 200만원(3.7%) 증액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134,096	139,098	5,002	3.7

자료: 대통령경호처

2. 세입예산안 내역

2025년도 세입예산안 5억 4,7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와대 인근 주차장 부지의 사용 허가에 따른 토지대여료 수입(51-511)이 2024년과 동일한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둘째, 통신기지국 임대료 등을 수납하는 건물대여료(51-512)가 2024년 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셋째,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는 2024년 예산과 동일한 700만원,

넷째, 폐탄두, 폐차 등 재화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69-691)은 2024년 예산 대비 1,200만원(60%) 증액된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토지대여료 (51-511)	456	456	-	-
건물대여료 (51-512)	49	52	3	6.1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7	7	-	-
기타 잡수입 (69-691)	20	32	12	60
총 계	532	547	15	2.8

자료: 대통령경호처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가. 총괄

2025년도 세출예산안 1,390억 9,8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4년 예산 대비 3.1% 증액된 635억 7,7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 예산 대비 0.03% 증액된 180억 1,1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 예산 대비 5.7% 증액된 575억 1,0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감 (B-A)	%
인건비	61,668	46.0	63,577	45.7	1,909	3.1
기본경비	18,005	13.4	18,011	12.9	6	0.03
주요사업비	54,423	40.6	57,510	41.3	3,087	5.7
합계	134,096	100	139,098	100	5,002	3.7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인건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9억 900만원 (3.1%) 증액된 635억 7,700만원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보수(110-01)	61,259	63,134	1,875	3.1
연가보상비(110-05)	409	443	34	8.3
합 계	61,668	63,577	1,909	3.1

자료: 대통령경호처

다. 기본경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600만원(0.03%)이 증액된 180억 1,100만원임.

세부사업별로 보면,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6억 3,2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억 5,300만원(2.4%)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113억 7,9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억 4,700만원(△1.3%)이 감액됨.

그 중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의 증액은 상용임금(110-03) 1억 1,700만원, 일용임금(110-04) 2,500만원 증액 등에 기인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금액	비율
총액인건비 대 상	인건비(110목)	3,737	3,879	142	3.8
	운영비(210목)	1,279	1,240	△39	△3.0
	직무수행경비(250목)	736	764	28	3.8
	민간이전(320목)	727	749	22	3.0
소 계		6,479	6,632	153	2.4
총액인건비 비대상	운영비(210목)	8,820	8,359	△461	△5.2
	여비(220목)	757	858	101	13.3
	민간이전(320목)	1,590	1,590	0	0.0
	유형자산(430목)	359	572	213	59.3
소 계		11,526	11,379	△147	△1.3
합 계		18,005	18,011	6	0.03

자료: 대통령경호처

라. 주요사업비

1) 총 괄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30억 8,700만원 (5.7%)이 증액된 575억 1,000만원으로, 1개의 단위사업 「경호행사 지원(1231)」으로 구성됨.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경호행사지원(1231)	54,423	57,510	3,087	5.7

자료: 대통령경호처

2) 세부사업별 내역

가)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요인 및 국민경호 활동」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고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원(16.4%) 증액된 30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8,789	9,073	284	3.2	· 임차료(210-14) 2억 900만원 증
여비(220목)	1,358	1,641	283	20.8	· 국내여비(220-01) 2억 8,300만원 증
특수활동비(230목)	7,604	8,254	650	8.5	· 특수활동비(230-00) 6억 5,000만원 증
업무추진비(240목)	2,105	2,672	567	26.9	· 관서업무비(240-02) 5억 6,700만원 증
직무수행경비(250목)	2,501	2,844	343	13.7	· 특정업무경비(250-03) 3억 4,300만원 증
건설비(420목)	650	836	186	28.6	· 공사비(420-03) 1억 7,300만원 증
유형자산(430목)	3,196	5,191	1,995	62.4	· 자산취득비(430-01) 19억 9,500만원 증
합 계	26,203	30,511	4,308	16.4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검측·검식 등 안전관리 소모품 구입, 각종 경호 장비 수리 및 임차, 탄약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400만원(3.2%) 증액된 90억 7,300만원,

여비(220목)는 국내 경호작전 출장여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300만원(20.8%) 증액된 1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수활동비(230목)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호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활동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6억 5,000만원(8.5%) 증액된 8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240목)는 경호작전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억 6,700만원(26.9%) 증액된 2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직무수행경비(250목)는 경호 관계기관 인원 지휘 및 협조 확보 등에 소요되는 현장 소요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4,300만원(13.7%)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비(420목)은 경호상황실 등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8,600만원(28.6%) 증액된 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형자산(430목)은 경호장비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9,500만원(62.4%)이 증액된 5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경호장비시설개선(1231-302)

[2025년도 경호장비시설개선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1,808	1,883	75	4.1	· 일반수용비(210-01) 1억 4,4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200	-	△200	순감	· 연구용역 종료
건설비(420목)	11,642	10,294	△1,348	△11.6	· 공사비(420-03) 12억 600만원 감
유형자산(430목)	6,889	5,140	△1,749	△25.4	· 자산취득비(430-01) 17억 4,900만원 감
합 계	20,539	17,317	△3,222	△15.7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및 현직 대통령의 경내·외 경호경비시설을 개·보수 및 구축하고 경호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2억 2,200만원 (△15.7%)이 감액된 17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경호경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납부, 관련 시설의 임차 및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7,500만원(4.1%) 증액된 1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첨단과학 경호경비체계 구축 관련 기술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용역 종료에 따라 2024년도 예산 2억원이 순감되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건설비(420목)는 노후화된 전·현직 대통령 경호·경비시설 개선 및 경비시스템 과학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억 4,800만원(△11.6%) 감액된 10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노후화된 경호경비, 특수통신, 검측 등 장비의 교체와 드론 등 신종위협에 대비한 과학경호시스템의 신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7억 4,900만원(△25.4%)이 감액된 5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경호업무정보화(1231-303)

[2025년도 경호업무정보화(정보화)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1,254	1,766	512	40.8	· 관리용역비(210-15) 4억 3,6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150	950	800	533.3	· 일반연구비(260-01) 8억원 증
유형자산(430목)	2,585	1,273	△1,312	△50.8	· 자산취득비(430-01) 13억 1,200만원 감
합 계	3,989	3,989	-	-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정보화」 사업은 경호업무 정보화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동일한 3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전산소모품 및 전산망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억 1,200만원(40.8%) 증액된 17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경호업무 전산화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원(533.3%) 증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경호정보보호시스템 및 경호정보망시스템의 개선과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억 1,200만원(△50.8%) 감액된 1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라) 경호안전교육원 운영(1231-304)

[2025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인건비(110목)	38	44	6	15.8	· 일용임금(110-04) 600만원 증
운영비(210목)	1,725	1,838	113	6.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300만원 증
보전금(310목)	5	6	1	20	· 포상금(310-03) 100만원 증
건설비(420목)	473	463	△10	△2.1	· 공사비(420-03) 1,000만원 감
유형자산(430목)	451	342	△109	△24.2	· 자산취득비(430-01) 1억 900만원 감
합 계	2,692	2,693	1	0.04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은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00만원(0.04%) 증액된 2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110목)는 경호안전교육원 훈련시설 도장공, 녹지대 관리, 식당 조리 보조 등을 위한 일용직 고용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15.8%) 증액된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운영비(210목)는 각종 교육원 기본 운영 및 교육물품 임차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300만원 (6.6%) 증액된 1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전금(310목)은 위험물질 관독능력 경연대회 및 경호처장배 사격 대회의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20%) 증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건설비(420목)는 경호안전교육원의 각종 교육훈련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Δ 2.1%) 감액된 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경호교육훈련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900만원(Δ 24.2%) 감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 경호경비과학화(R&D)(1231-501)

[2025년도 경호경비과학화(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500	1,500	1,000	200	·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 예산 반영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경비과학화(R&D)」 사업은 보안검색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2)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500	1,500	1,000	200	·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 예산 반영

자료: 대통령경호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및 5G 등 국가전략 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Ⅱ.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총괄: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가. 개 요

대통령 경호처는 2025년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총 129억 5,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상세내역
일반수용비(210-01)	899	· 경호작전 · 훈련 소모품, 응급의약품 등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7	· 경호작전 정보통신망 구성 등
피복비(210-03)	300	· 경호작전 · 훈련 피복비
임차료(210-07)	3,342	· 상황실, 장비, 차량, 숙소 등 임차료
유류비(210-08)	200	· 경호작전차량 유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87	· 차량, 장비 및 통제단 사무실 유지보수비
국내여비(220-01)	438	· 경호안전통제단 및 경호팀 출장여비
특수활동비(230-00)	1,500	· 특수장비 도입 및 보안 경호활동비 등
관서업무추진비(240-00)	676	· 경호작전 관계기관 업무협의 관련
특정업무경비(250-03)	150	· 경호작전 특정업무경비
실시설계비(420-02)	54	·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및 경호작전 대기실 조성 관련
공사비(420-03)	777	
시설부대비(420-05)	5	
자산취득비(430-01)	2,560	· 경호장비 및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조성 관련
합 계	12,955	

자료: 대통령 경호처 제출자료 재구성

첫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계기로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추진된 정상회의로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둘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정상회의로서 지난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경주)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요]

구 분	내 용
출범 배경	· 80년대 후반 ASEAN 국가만의 협력이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광역 지역협력체 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EU 통합, NAFTA 협상 종결 등 블록경제 대두, ASEAN의 대미 수출 증가로 미국을 포함한 협력체 결성 필요성 인식
주요 연혁	· 1989년 11월 제1차 각료회의 개최(호주 캔버라) · 1993년 11월 제1차 정상회의 개최(미국 시애틀) ·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한국 부산)
회원국 현황	· 한국, 미국, 일본, 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 멕시코 등 21개국 ※ 옵서버(3개 기구): 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제도포럼(PIF) 사무국
주요 의사결정체제	· (핵심절차) 고위관리회의(SOM) → 합동각료회의(AMM) → 정상회의(AELM)를 통해서 의사결정 · (분야별 장관회의) 통상, 재무, 관광, 중소기업, 식량안보 등 분야별 장관회의 정기 · 부정기적 개최
APEC 기본성격	·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협력을 추구하고 회원국 간 합의사항은 비구속적 · 기업활동 촉진을 목표로 역내 민간부문의 참여 확보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 재구성

나.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 129억 5,500 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세부사업인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에 함께 편성하였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7,678	26,203	30,511	4,308	16.4
다자간 정상회의	-	-	12,955	12,955	100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와 같이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예산에 통합·편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첫째,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⁹²⁾에 따른 경호대상인 대통령과 그 가족 및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일상적인 경호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의²⁹³⁾에 따라 대

9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법적근거가 구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을 모두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할 경우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한계가 있고,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동 사업이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집행 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제약 없이 비목별 분류에 의한 제약만을 받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 및 범위와 달리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셋째, 해당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외교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3031-401)」 및 「2025 APEC 의장국 운영(3031-403)」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통령경호처 역시 지난 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1231-309)으로 편성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2025년도 외교부 소관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	-	6,854	6,854	100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운영(3031-403)	2,460	100,830	98,370	3998.8

자료: 2025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2023년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1231-309)	-	5,005	5,005	4,507	498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요에 따라 발생하는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⁴⁾

94)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다자간 정상회의는 방한하는 국민에 대한 경호·경비 예산으로, 이는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의 예산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의 중복집행 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에 함께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 안티드론차량 제작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작전 수행 간 경호작전 장비 및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조성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430-01)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20억원이 ‘안티드론 차량’ 제작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안티드론 차량’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다자간 정상회의 간 무인기 위협 및 자폭드론, 북한 오물풍선 등의 대공 위협 및 최근 트럼프 암살미수 사건 등 저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음.

[안티드론 차량 제작 사업 개요]



- 사업명 : 다자간 정상회의 대비 안티드론차량 신규 제작
- 사업내용 : 무인체에 대한 탐지·식별·대응의 통합작전 등
대공작전에 특화된 작전차량 제작
- 제작기간 : 9개월
- 사업비 : 2,000백만원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안티드론 차량 제작에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11월에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제작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비 도입·제작 등의 전 단계에서 사업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장비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티드론 차량 제작에는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에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작전을 위한 일회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경호업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라.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예정된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신변 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할 예정임.⁹⁵⁾

9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되고, 군·경·소방·해경·국정원 등 다 부처·기관 협동으로 약 2만명의 경호경비작전 동원 인력을 구성하여 공항·숙소 및 행사장 등에서의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할 계획임.

트럼프 암살미수 등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호환경 하에서 내년도 예정된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방문국 국가정상, 국제기구 대표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경호와 함께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비한 행사장의 경호·경비 및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우 대규모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이 없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 예정이므로,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의 원활하고 조직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청 등 관계 공공 기관과의 사전 협조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정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억 5,300만원(2.4%) 증액된 66억 3,200만원임.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677	6,479	6,632	153	2.4
고용부담금(320-09)	580	727	749	22	3.3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고용부담금 예산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고용부담금(320-09)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200만원(3.3%) 증액된 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최근 4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고용부담금(320-09)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도 역시 9월말 기준 집행실적(221백만원, 집행률 30.4%)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고용부담금(320-09) 예산 및 집행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집행률(B/A)
2021년	613	580	33	94.6
2022년	623	551	72	88.4
2023년	705	580	125	82.3
2024년	727	221	-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의 높은 퇴직률과 더불어 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상 신원조회, 상대적으로 긴 면접 절차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담금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320-09)의 집행실적이 개선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집행실적과 내년도 예상소요를 감안하여 고용부담금(320-09) 예산이 적정 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3.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가. 개 요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원 증액된 30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7,678	26,203	30,511	4,308	16.4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0	1,769	1,800	31	1.8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유지보수 대행용역 예산의 적정비목으로 변경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안 18억원 중 7,900만원을 2024년 12월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호장비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고,

관리용역비(210-15) 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⁹⁶⁾

종합하면, 해당 예산은 용역계약을 통해 1년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므로, 그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보수 대행용역 예산 7,9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가 아닌 관리용역비(210-15)로 변경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경호장비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 비목 변경 수정의견(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주요내용	예산안	예산 비목	
			~에서	~으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	7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관리용역비 (210-15)

9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p.231

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1231-304)

가. 개 요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은 대통령경호처 및 경호지원부대 교육, 국내 외 경호 관계기관의 경호경비 관련 수탁교육을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00만원(0.03%) 증액된 26억 9,300만원임.

[2025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177	2,692	2,693	1	0.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55	380	380	-	-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경호안전교육원의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4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2021년도 1,000만원, 2022년도 1억 6,300만원 및 2023년도 1억 1,3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301백만원, 79.2%)을 감안하면, 연말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4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및 집행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본예산	세목조정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년	270	10	280	279	1
2022년	270	163	433	433	-
2023년	274	113	387	355	32
2024년	380	-	-	301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국제유가 및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에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이상고온 및 저온 현상에 따른 냉·난방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면,⁹⁷⁾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7) “2024년 6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2%로 최근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만큼 향후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1년 이후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으로 보인다. ...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와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또 다른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상고온 및 저온 현상에 따른 냉방수요의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pp.106-108)

5. 경호경비과학화(R&D)(1231-501)

가. 개 요

‘경호경비과학화(R&D)’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시작된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출연금(360-05목) 명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호경비과학화(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360-05)	1,000	500	1,500	1,000	2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AI X-Ray 프로그램 조기 개발을 위한 증액 검토 필요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 특허⁹⁸⁾를 등록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의 AI를 이용한 위험물 검출 등 보안검색 업무 효율화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임.

98) 대통령경호처가 등록한 특허명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4색 X-ray 장비를 활용한 원소의 판별방법 :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따라 X-ray 결과값 중 색상이 달라지는 원리를 보안검색 업무에 적용하는 기법
- ②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 대통령경호처 특허 검색기법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동 R&D 사업은 기존의 X-Ray 검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재래식 무기, 액체 위험물 및 위장무기류,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AI X-Ray 프로그램 개발 사업개요]



자료 : 대통령경호처

한편,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 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

[변경된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자료 : 대통령경호처

동 R&D 사업은 AI 위험물 탐색 시스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한 바 있음.⁹⁹⁾

99) 국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붙임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p.344

－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단위과제 중 ‘빅데이터 구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경우 사업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¹⁰⁰⁾

100) 참고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2)

가. 개 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은 경호대상자 및 국가요인에 대한 신종 위협 대응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異機種)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출연금(360-05목)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0억원(200.0%)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360-05)	-	500	1,500	1,000	2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160억원씩 분담하는 구조임.

[연도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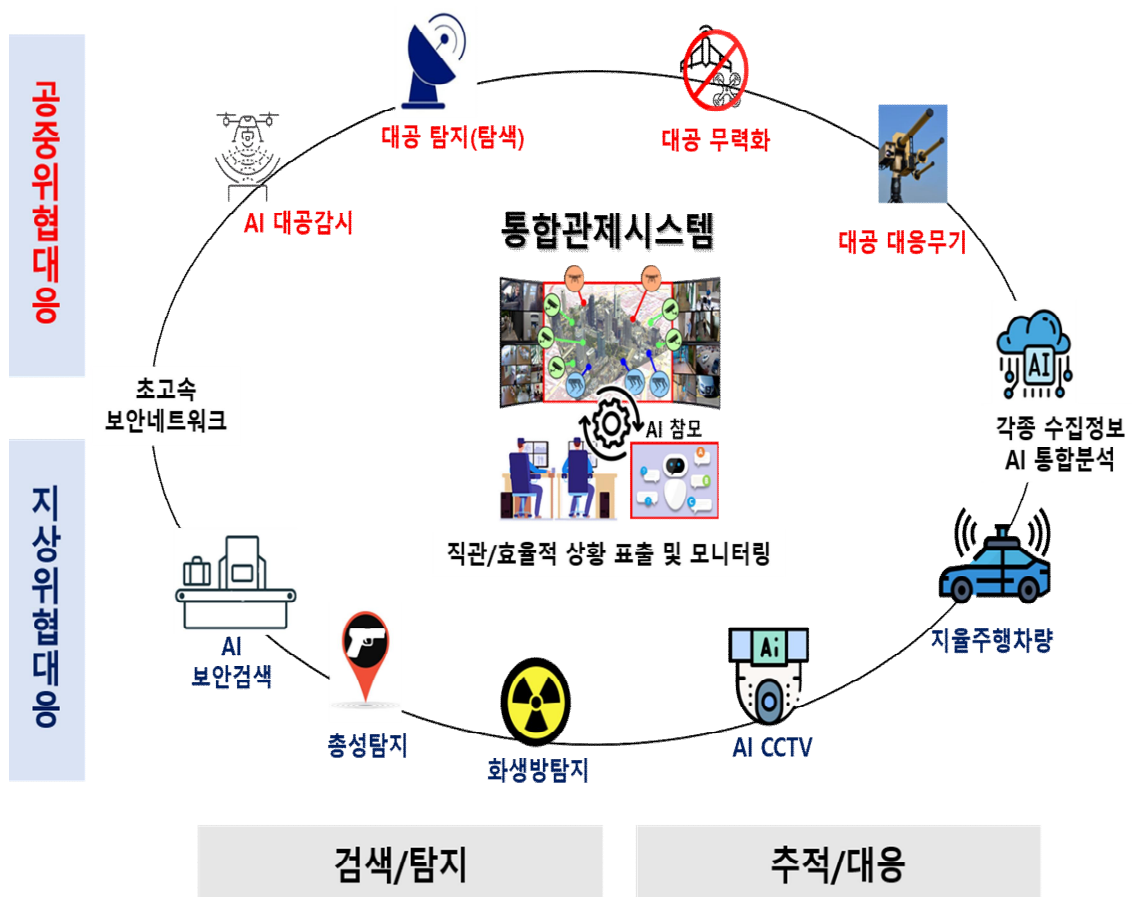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50%)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R&D 사업은 경비안전 수요부처(대통령경호처)와 R&D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기존의 단순 조합 형태의 관계 기술을 벗어나, 경비인력 대체와 안전수준 제고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관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이동형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개요]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사업은 AI 통합관제,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실증지원 R&D까지 총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AI 통합관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각 과제마다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¹⁰¹⁾

[연도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구 분	내 용
AI 통합관제	· 국가요인 및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인 사전 예측 및 즉각 대응 가능한 입체적 경호 관제시스템 개발
무인기 통합대응	· 소형 저고도 무인기의 탐지·추적·식별 성능 향상 및 근무자의 피로도 완화와 물리적 대응 방안 마련
경비로봇	· 고정형 CCTV 음영지역 해소와 안정적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한 자율주행 경비로봇 기술개발
실증지원 R&D	· 세부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과제 ②, ③ 결과물을 과제 ① 에 통합) 및 경호·경비 환경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와 실증기술 개발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철저한 사업관리 및 결과물의 활용·보급계획 수립 필요

동 R&D 사업은 5년간 총 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당초 사업추진의 배경이 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AI 통합관제와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등 단계별 유기적 연계 방안과 함께 추후 R&D 결과물이 시제품 인증·표준화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동 R&D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단순 조합

101) AI 통합관제 과제 사업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선정되었음

형태의 관제기술을 벗어나, 인력 위주 경비시스템을 AI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경비안전 관제, 보안검색, 재난안전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복합 경비안전 기술로서 군·경·공항·항만·정부청사 및 각 공공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의 경비안전 기술 R&D와의 차별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할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은 국회, 법원 등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국가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국가기관과 R&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V.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1. 국회 소관

- 수정의결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수정의결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수정의결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수정의결

VII. 부대의견

1. 국회 소관

-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직급 세분화의 추진 필요성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무처 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회사무처는 퇴직공무원 국회 상시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및 국회보좌진 인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승하차 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중계 시 시청자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회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회사무처는 상업적 이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 및 본회의 영상을 일반국민들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개선·운영을 적극 검토한다.
- 국회사무처는 의정기록과의 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 예산 집

행, 초과근무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네이버 클로바노트 사용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공정성·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국회사무처는 청소년 대상 경내 야영 프로그램 개최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 및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회의 직무 특성에 맞는 자가진단과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헌정자료 수집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취득비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방문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치도

록 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국회도서관은 자료 기증을 기관별 1회 500책(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1회 1,000책(점)으로 확대하고,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재조사 및 홍보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인권교육원에서 실시 또는 사용하는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콘텐츠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의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방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균형있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반기별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등 골프장 이용 시 예약자명, 결제방식 및 참석자 명단 등의 자료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

4. 대통령경호처 소관

-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경호기법 강구 및 직원교육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작전 요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및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AI X-Ray 프로그램 개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른 국가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붙임 1 】 2025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I.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일반회계	22,954	△301	22,653
	국가인권위원회	일반회계	588.2	△16	572.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일반회계	-	△8,401	△8,401
	대통령경호처	일반회계	-	△50	△50
	합 계		23,542.2	△8,768	14,774.2

II.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국회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입법활동지원 (1031-300)	50,450	49,279	52,570	1,853	○ 국회와 국회의원이 뉴스통신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의 정보와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 18억 5,300만원 증액	
					500	○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챗 GPT, 퍼플렉시티, AI 동영상 제작서비스 등 유료버전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산 5억원 증액	
					504	○ 인턴의 정액급식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 5억 400만원 증액	
					100	○ 국회 인턴비서관의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정활동지원 인턴경비 1억원 증액	
					325	○ 코로나-19 해소로 지역출장이 증가추세이므로 국내여비 3억 2,500만원 증액	
					9	○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마급 등) 2명 두는 것에 비례하여 해당 의원실에 지원되는 특근매식비 9백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국정감사 및 조사 (1031-305)	1,395	1,065	1,595	530	○ 제22대국회 2차년도인 2025년도의 원활한 국정 감사·조사 지원을 위하여 5억 3,000만원 증액	
3	국방위원회 운영지원 (1032-306)	164	164	470	306	○ 국회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 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파병부대(청해, 아크, 동명, 한빛) 현장점검 필요성 제기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사업추진비 3억 600만원 증액	
4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지원 (1032-314)	192	192	187	△5	○ ‘남북철도연결사업시찰’(국내여비, 283만원) 및 ‘개성공단시찰관련 활동비’(사업추진비, 200만원) 총 5백만원은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감액	
5	특별위 운영지원 (1032-319)	2,633	1,133	2,633	1,500	○ 내년도에도 연금개혁, 정치개혁 특위 등 비상설 특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위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5억원 증액	
6	의원외교활동 (1033-300)	15,219	12,137	12,187	50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지원 예산 5천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지원 (1033-302)	3,065	3,065	3,852	400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및 한·일 2.0시대 개막을 위한 연맹-민간 차원의 합동 프로젝트 개최를 위하여 한일의원연맹 지원 예산 4억원 증액	
					100	○ 난민 현장 시찰, 난민 문제 대책 마련 및 국제인권정책 연구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리더십 제고를 위하여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원 증액	
					195	○ 국제교류를 통한 연맹 활성화와 청소년 교류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9,500만원 증액	
					39	○ 다양한 학술연구단체와의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한중의원연맹의 연구용역 예산 3,900만원 증액	
					53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아태지역 환경개발 의원회의(APPCED) 개최 지원을 위한 5,300만원 증액	
8	헌정회지원 (1034-301)	5,733	5,473	5,529	△230	○ 대한민국헌정회의 발전과 회원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로회원지원 내역사업 2억 3,000만원 감액(276인 기준 → 260인 기준)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286	○ 대한민국헌정회의 발전과 회원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지원 내역사업 2억 8,600만원 증액	
9	국회미래연구원 (1034-308)	4,261	4,261	4,332	71	○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처우개선분 공통기준(3% 인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7,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0	감사활동 (2031-300)	187	187	215	28	○ 국회인권센터가 괴롭힘과 기타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고충심의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의견 검토,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2,800만원 증액	
11	인사 및 운영지원 (2031-301)	5,878	6,608	6,857	249	○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간식비 인상, 교직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억 4,900만원 증액 필요	
12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	4,024	3,635	3,715	80	○ 수어통역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제공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예산 8,000만원 증액	
13	연수활동지원 (2031-306)	4,874	5,106	5,566	346	○ 고성연수원의 건물 안전보강과 산불피해 방지 등 ‘안전강화 및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3억 4,600만원 증액	
					46	○ 「기계설비법」 제17조 등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인 고성연수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4,600만원 증액	
					68	○ 고성연수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소요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의 이용 집행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소요예산 6,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4	입법서비스 지원활동 (2032-300)	734	734	783	49	○ 지역현안입법지원토론회 예산안(3,500만원, 연 5회 개최 기준)은 의원실의 높은 수요와 의원입법지원의 내실화를 고려하여 4,900만원 증액	
15	국회청사유지및 관리 (2033-300)	50,969	57,500	58,247	487	○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관련 예산 4억 8,700만원 증액	
					260	○ 국회 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회 야외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시설 개보수 예산 2억 6,000만원 증액	
16	입법정보화 (2034-500)	48,978	42,107	42,398	321	○ 국회영상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국회의원·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소요예산 3억 2,100만원 증액	
					△30	○ ‘의정지원DB구축’(4억 3,900만원, 일반연구비)사업은 중복인력 계상으로 인한 용역업체 부정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 감액	
17	국회방송운영 (2036-300)	17,244	17,039	17,064	25	○ ‘국회방송 영상기록 디지털 변환 및 저장 용역’ 사업의 과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8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0,770	11,770	11,931	△6	○ 의회정보자문단의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및 회의 개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 600만원 감액	
					97	○ 「세계의 헌법」 제4판 발간을 위하여 9,700만원 증액	
					70	○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 도서 기증 대상 기관 확대(30개 기관→50개 기관)를 위하여 9,700만원 증액	
19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3031-301)	2,928	2,447	2,985	150	○ 국회부산도서관이 방문 이용자 및 정보수요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 1억 5,000만원 증액	
					252	○ 국회부산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국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ICT 장비 구입 예산 2억 5,200만원 증액	
					136	○ 발달장애인 4인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직접 고용(반일제 근로자)할 수 있도록 1억 3,600만원 증액	
20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035-500)	31,451	29,026	29,824	234	○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예 필요한 예산 2억 3,400만원 증액	
					594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고도화(입법 전후 비교 분석 서비스, 생성형 AI기반 자동리포트 생성 서비스, 입법과 통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예산 5억 9,400만원 증액	
					△30	○ SW사업 영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하여‘데이터분석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예산 3,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1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4031-300)	3,486	3,287	3,477	190	○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4년 예산안 대비 42.6% 감액(△2억 8,200만원)된 정책연구비 일부를 복원하기 위하여 1억 9,000만원 증액	
22	사무처인건비 (7001-150)	350,374	361,518	370,852	4,453	○ 6급 이하 비서관의 기준호봉을 각 3호봉씩 상향하기 위한 예산 44억 5,300만원 증액	
					290	○ 특수업무 겸임 보좌직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특수업무겸임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2억 9,000만원 증액	
					2,705	○ 야근·주말 출근 등이 잦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연가보상비 인정 연가일수 확대(5일→15일)를 위한 연가보상비(110-05) 예산 27억 500만원 증액	
					1,886	○ 국회의원 보좌진의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상시화에 상응하는 충분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하여 18억 8,600만원 증액 * 현재 월 33시간(운전업무보좌직원의 경우 35시간) → 월 40시간으로 상향	
2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16,542	17,273	18,310	737	○ 국회의원 보좌진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를 800점으로 상향하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족 복지포인트를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상 150점으로 상향하는 등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7억 3,700만원 증액	
					300	○ 의원실에 지원되는 업무용 택시 지원예산 3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4	연수활동지원 (2031-306)	4,874	5,106	5,237	131	○ 공무원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 및 가족수당 도입을 위하여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총 20억 8,000만원 증액	
	의회경호 및 방호 (2031-310)	5,212	6,877	7,035	158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2033-300)	50,969	57,500	58,686	1,186		
	입법정보화 (2034-500)	48,978	42,107	42,158	51		
	국회방송운영 (2036-300)	17,244	17,039	17,241	202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0,770	11,770	11,801	31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3031-301)	2,928	2,447	2,501	54		
	기관운영지원 (7011-251)	5,216	5,290	5,412	122		
	기관운영기본경비 (7019-250)	2,983	3,054	3,140	86		
	기관운영및지원 (7020-250)	1,823	2,001	2,060	59		

나. 국가인권위원회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7,416	7,810	7,794	△6	○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600만원 감액	
					△10	○ 유튜브의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1,000만원 감액	
2	인권의식 증진 (1031-300)	780	680	700	20	○ 인권의 날 행사 예산의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용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00만원 증액	
3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1033-303)	257	231	257	26	○ 동 사업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600만원 증액	
4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512	510	512.2	2.2	○ 군 사망사건 입회활동 강화를 위하여 입회활동비 220만원 증액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1,319	1,205	1,305	100	○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37-500)	1,044	902	1,242	200	○ 2025년도에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하여 2억원 증액	
					140	○ 노후화된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 증액	
7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1037-501)	693	609	709	100	○ 인권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하여 1억원 증액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본경비 (1011-200)	21,557	21,840	21,740	△100	○ 동 세부사업 내 일용임금(3억 4,100만원, 전년 동)은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일용임금의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1억원 감액	
2	업무지원비 (1131-300)	16,943	17,428	9,177	△8,251	○ 동 세부사업 내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전년 동)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전액(82억 5,100만원) 감액	
3	국정운영관리 (1131-301)	6,472	6,630	6,580	△50	○ 동 세부사업 내 정책연구비(5억원, 전년 동)는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5,000만원 감액	

라. 대통령경호처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011-201)	6,479	6,632	6,582	△50	○ 동 세부사업 내 고용부담금(7억 4,900만원,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은 최근 매년 증액되는 반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감액	

Ⅲ. 부대의견

가. 국회

-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직급 세분화의 추진 필요성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무처 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회사무처는 퇴직공무원 국회 상시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및 국회보좌진 인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승하차 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중계 시 시청자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회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회사무처는 상업적 이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 및 본회의 영상을 일반국민들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개선·운영을 적극 검토한다.
- 국회사무처는 의정기록과의 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초과근무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네이버 클로바노트 사용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공정성·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국회사무처는 청소년 대상 경내 야영 프로그램 개최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 및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회의 직무 특성에 맞는 자가진단과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헌정자료 수집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 취득비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방문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사무처는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국회도서관은 자료 기증을 기관별 1회 500책(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1회 1,000책(점)으로 확대하고,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재조사 및 홍보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인권교육원에서 실시 또는 사용하는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콘텐츠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방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균형있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반기별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등 골프장 이용 시 예약자명, 결제방식 및 참석자 명단 등의 자료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

라.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경호기법 강구 및 직원교육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작전 요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및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AI X-Ray 프로그램 개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대통령경호처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른 국가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붙임 2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비고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조성 (1400-710)	-	113	1,130	1,017	○ 문재인 前 대통령 내외분의 경호조치 강화를 위한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에 총 사업비 전액을 일괄하여 반영하기 위한 건설보상비(410-00) 10억 1,700만원 증액 필요	